

글로벌 해운업계 '인플레 유발자' 찍힐라 **6**



신임 금감원장 2파전... 이번주 발표 **12**

민생도 집값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번복'

與 '지역업 손실보상 소급불가' 가닥 주택공급 하겠다던 과천시 "철회" 날벼락 맞은 시장, 黨政 행보에 비판

조변석개(朝令暮改). 정부·여당이 '손바닥 뒤집듯' 부동산·코로나19 피해보상 정책을 뒤집어 정책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여당은 6일 당정 회의를 열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유희지에 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과천청사 유희지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하던 달 만이다. 당정은 기존 계획보다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대체지를 제시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미 서울 노원구와 1만 가구 규모 태릉골프장(CC) 공공주택 사업 변경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이미 과천에서 후보지를 바꾸는 선례를 만든 이상 다른 지역의 요구를 묵살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며 "공급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변경 요구가 이어지면 주택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다리다 지친 청약 대기자가 재고주택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 집값을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급작스레 주택 정책 방향이 바뀐 건 공급 분야뿐만이 아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도 정부의 변심에 날벼락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입임대사업자(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사업자)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단기 매입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 제도가 사라진 데 이어 남아 있던 10년 장기 매입임대(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대상)마저 이번 결정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수요 조정 정책 핵심인 세제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중부세) 과세 대상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만든 새로운 재산세·양도세·중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날(6월 1일)을 앞세우고 있다. 당정은 이달 국회에서 재산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고 당장 올해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과 관련, 법안에 '소급 적용' 명시 배제로 가닥을 잡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을 고려해 '사실상' 소급적용에 준하는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원이나, 별도 부칙 또는 규정을 담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을 없던 일로 되돌리면서 당정의 오락가락 행보에 정치권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비판이 거세다. 박종화 기자 pbell@, 김윤호 기자 uknow@



文 "지켜주지 못해 죄송"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부사관의 부모를 만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위로했다. ▶관련기사 9면 연합뉴스

G7 "최저 법인세율 15%" 조세개혁 합의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합의하고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로 했다. 2013년 시작된 협상이 마침내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된 역사적 합의다.

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관련기사 10면

기업 소재지가 아닌 매출을 창출하는 곳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최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익의 최소 20%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에 할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실리콘밸리 공룡들이 이에 대부분 해당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은 불리하지만, 법인세 인하

경쟁을 종식하고자 통 큰 양보를 했다는 평가다.

이번 회의는 4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법인세율 하한 기준을 설정하자고 각국에 요청한 후 소집됐다. 옐런 장관은 국가마다 다른 법인세율로 인해 자국 기업이 조세회피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적인 합의를 요구했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은 모두 G7의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코인 잡겠다는 금융위, 입법은 뒷짐

스페셜 리포트

주무부처 지정前 관련법 3건 발의 "소위 논의때 의견" 소극적 자세 일관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뒤늦게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도권화의 기초가 되는 법 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안 발표에 따라 주무 부처가 된 금융위원회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5면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당초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뤄진 관계부처 협의회에서도 업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계부처 협의에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했다.

가상자산사업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양경숙·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관련 의안 3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의안들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문제는 3개 의안 모두 주무 부처가 부재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비제도권에서 형성됐음에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600만 명에 육박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개사 기준)하고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10조 원을 훌쩍 웃돌 정도로 비대해졌다. 금융 시장의 하위 개념이 아닌 새로운 권역이 조성된 만큼 가상자산업권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면 기초가 되는 법의 틀이 중요하다.

시장의 중요성과 달리 법 제정 작업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일반적으로 법안 제정 시 주무 부처가 먼저 결정되고, 그다음에 해당 부처가 중심이 돼 법안의 초석을 다진다. 그런데 가상자산업법은 주무 부처가 정해지기 전에 이미 의원입법안이 나왔다. 금융위는 의원입법안들이 정부위에 상정돼 논의하면 그때 의견을 나누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가상자산 시장을 떠밀리듯이 맡겨 된 만큼 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법 제정에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의원 입법 절차상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시작하면 주무 부처 참여가 보편적이지만,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주무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 정부가 손놓고 있던 시장을 금융위에 맡았다고 했으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화하면 질타받을 일만 남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내 가게가 전부인 당신이기에 내 가게에서 모두 가능해지도록

i-ONE 소상공인

i-ONE 소상공인 | 오직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금융플랫폼

기업·개인 통합뱅크부터 전문가의 사업정보까지 앱 하나로 누리세요!

기업·개인 통합뱅크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통합 계좌 관리	대출·기간연장 초저금리 특별대출 기간 연장 신청 (단, 개별 SMS 통지 받은 고객에 한함)	전문적인 사업정보 소상공인 맞춤 전문 지식과 정책자금 정보 제공	경영 지원 세무, 직원 및 거래처 관리 등 효율적 경영 업무 지원
--	---	---	--

초저금리대출 기간연장 하고 다양한 혜택 받기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총부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쌀 20kg '6만1048원'·계란 한 판 '7521원' 치솟는 물가에 초라해진 밥상

직장인 이 모씨(41)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너무 오른 먹거리 가격에 깜짝 놀랐다. 계란 한판(30알)은 1만 원이 넘었고, 대파 한 단, 사과 1개도 3000원이 넘었다. 가공식품도 비싸졌다. 콜라와 사이다는 이전보다 100원 이상씩 가격이 올라 장바구니에 담기 망설여졌다.

지난해 긴 장마로 작황이 부진했던 농축산물 가격이 올 들어서도 널뛰고 있다. 여기에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치솟은 계란 값도 떨어질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쌀과 밀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즉석밥, 빵 등 가공식품까지 줄줄이 가격이 인상되며 소비자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서 계란 한 판에 1만원=6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상승하며 2년 1개월만에 2%대를 넘어섰다. 특히 신선식품과 외식 물가 인상이 두드러졌다.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소매가로 보면 4일 기준 대파(상품, 1kg)의 소매가는 3200원으로 1년 전(2661원)보다 20.3% 뛰었다. 최고조에 올랐던 2~3월에 비하면 파 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가격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다. 과일 가격도 급등해 사과 후지 상품의 소매가는 10개에 3만2565원이다. 평년(1만9877원)에 비해서는 무려 63.8% 뛰었다.

쌀 20kg의 소매가는 6만1048원으로 1년 전(5만1593원)에 비해서 18.3% 올랐고, 평년(4만6405원)보다는 31.6% 치솟았다. 쌀값이 오른 이유는 지난해 50일 넘게 계속된 장마와 태풍, 일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AI 여파에 공급이 줄며 특란 계



사과 63.8%·라면 2.8% 등 소비자물가 25개월 만에 2%대↑

‘오레오’ 10년 만에 200원 올려 CU·GS25 등 택배비 인상 예고

란 1판(30개) 중품의 평균 소매가는 7521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5175원, 최근 5년 평균인 5284원에 비해서는 2300~2400원 오른 수치로 6500원을 넘나들던 연초보다도 1000원 더 비싸다. 실제 소비자가 소매로 구입할 수 있는 계란 가격은 대부분 1만 원이 넘는다. 다만,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계란 가격이 6월 이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6월 축산관측’에 따르면 6월 하순부터 계란 일평균 생산량이 4200만 개를 초과해 계란 산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외식 물가 역시 올 들어서만 1월 1.1%가 인상된 것을 비롯해 매월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4월에는 1.9%나 올랐다. 라면, 치킨 가격도 크게 뛰었다. 라면(외식)은 2019년 12월(3.5%) 이래 가장 높은 2.8% 인상됐고 치킨도 2.4% 상승했

다. 햄버거 가격은 6.1%, 김밥도 4.2%로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 택배비도 비싸져=공산품도 가격이 뛰긴 마찬가지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오레오 초콜릿 크림·하이 트크림 가격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올랐다. 오레오 가격 인상은 2011년 동서식품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연초에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푸레쥬르가 90여 종의 제품 가격을 평균 9%씩 인상했다. 쌀 가격 오름세에 CJ제일제당은 ‘햇반’ 가격을 1600원에서 1700원으로, 김밥 20여 종 가격은 300원씩 올렸고, 동원F&B는 즉석밥 ‘센쿱’ 7종 가격을 1350원에서 1500원으로 11% 인상했다.

코카콜라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코카콜라 캔·페트병 가격을 지난 1월 개당 100원씩 인상한 데 이어 롯데칠성음료도 칠성 사이다와 펍시콜라, 레스비, 핫식스 등 일부 음료 제품 가격을 평균 4.7% 올렸다.

편의점 택배비도 인상된다. CU는 15일부터 택배비를 최저 2600원(무게 0~350g, 동일권역 기준)에서 2900원으로 300원 인상하고, GS25도 다음 주 초 택배비 인상 폭과 시점을 공지할 계획이다.

남주현 기자 jooh@

<국제 해커조직>

<테슬라 최고경영자>

‘어나니머스’ 타깃 된 ‘머스크’

트위터에 비트코인 결별 암시
성인물 관련 코인 띄워 시세 요동
“시민 조롱, 임자 제대로 만났다”



터에 액체를 나타내는 이모티콘과 로켓 이모티콘, 화살표와 달 이미지를 올렸다. 이를 두고 트위터 사용자들은 액체와 로켓과 직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의 말 한 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자 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에 그간 전기차 기술로 쌓아 왔던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는 무너지고 머스크는 ‘냉소의 대상’으로 추락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전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비트코인이란 해시태그와 깨진 하트 모양 이모티콘, 이별하는 남녀 대화를 담은 이미지를 올렸다. 머스크가 해당 트윗을 올린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5% 넘게 하락했다.

같은 날 저녁 머스크는 뜬금없이 트위터에 캐나다(Canada), 미국(USA), 멕시코(Mexico)의 이름을 순서대로 쓴 게시물을 올렸다. 세 국가 이름의 앞글자만 따오면 CUM이 되는데, 이는 남성의 정액을 일컫는 속어다. 머스크는 이어 트위터

트윗을 조합해 성인물 콘텐츠 거러에 쓰이는 가상화폐 ‘컴로켓(CumRocket)’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했다. 이 영향으로 컴로켓 가격은 한때 0.0548달러에서 0.2481달러로 352% 폭등했다.

한때 머스크의 트윗에 환호했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제 분노하고 있다. 그의 트위터 계정에는 욕설과 함께 “시장 조작 트윗을 중단하라”, “비윤리적인 쓰레기”라는 항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업체 어웨이오 분석에 따르면 머스크의 평판지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4개월 만에 25%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적인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는 이날 “머스크가 열심히 일하는 시민을 조롱했다”며 “당신은 이제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고 공격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직장인 61% “우리 회사 디지털 대응 미흡”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있음에도 국내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7%만이 소속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미흡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61.3%에 달했다.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생산, 마케팅 등 업무 전반에 접목해 기업 운영을 개선하고 가치를 혁신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부문별로 대응수준을 보면 비대면 회의

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수행’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생산이나 마케팅 활동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부문도 긍정적 평가가 앞섰다.

‘디지털 인재 육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낙후된 제도 및 사회 인프라(35.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업 내부 문제를 걸림돌로 지적하는 직장인도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변화 의지 부족(31.8%)’과 ‘경직된 조직문화(20.5%)’, ‘기술력 부족(9.6%)’ 등을 문제로 꼽았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지난 20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의 일상을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 10가구 중 1가구는 KOEN의 에너지와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한국판 그린뉴딜로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20살 KOEN은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new renewable energy

탐라해상풍력 전경

與 “소급적용 빼고 일단 통과” 손실보상법 ‘후폭풍’ 예고

“소급과 비슷한 효과 지원책 마련, 보상 시점은 추후 논의” 당 내부서도 의견 충돌... 기재부·중기부 “소급 불가” 확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반발 거셀 듯...정책 신뢰 타격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에 집중하고 손실보상은 시점 논의를 뒤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고,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소급적용이라는 용어 자체를 빼고 우선 법을 통과시킨 뒤에 정부와 보상 시점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별도 지원책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한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손실을 본 분에 대해 보상을 하고 부족한 건 재난지원금 등으로 메꿀 부분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소급적용은 야당이

쓰는 용어이지 우리 당이 쓰는 게 아니다. 정부와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정해야 하고 그 후에 보상 시점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임을 상기하며 “8월이 돼 봐야 정부와 언제부터 보상할지 시점을 정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보상을 해야 할지도 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산출의 어려움, 막대한 행정비용, 형평성 문제 등 난점이 많다”며 “당장 법안에 소급적용을 넣는 것이 무리라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방안(별도 부칙이나 규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보상 시점은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을 통과시키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에 소급적용을 다시 추진하는 건 어려운 것으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에서 상무지구 상인회 회원들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보인다. 손실보상이 국회를 떠나 행정부로 넘어간 데다 추가 지원까지 시행한 상태에서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의 부칙이나 규정으로 소급적용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한 여야 의원 중 민주당 의원은 47명이다. 기재

부 불가론에 수긍해 완전한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공감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한 의원은 “우리가 애당초 소급적용이라는 용어를 꺼낸 때부터 이미 손실보상법은 난항이 불가피했다”며 “현실적으로 지나친 행정력 낭비와 보상액 산정 어려움, 형평성 논란 등 탓에 완전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갈피를 못 잡다 결국 소급적용

불가로 정해지면 혼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산자위 입법 청문회까지 열어 기대감을 키워놓은 상태라 더욱 그렇다. 당정이 내놓은 단일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야권이 관련한 비판을 쏟아낼 것이고 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이 표출되면, 그만큼 반발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호 기자 uknow@

태릉·용산·노원 등 곳곳서 반대운동 휘청이는 공공주택사업

“지자체·주민 사전 논의 없이 강행” 사업 후보지 주민들 ‘반대’ 목소리 수요자 불안 확산 ‘패닉버닝’ 우려

주택 공급 놓고 갈등 빚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단위: 가구)

지역	부지	규모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1만
서울 용산구	용산역 철도정비창	1만
	남영동 캠프킴	31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1000
	서초동 국립외교원	600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3500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후보지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과 사전 논의 없이 중앙정부에서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를 낙점한 후유증이 다. 공공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주민 모임인 ‘용산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용산역 정비장과 옛 제한미군 캠프킴 기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용산역 정비장과 캠프킴을 각각 업무지구와 복합상업지구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산구도 최근 캠프킴 일대를 상업·업무·문화 기능을 갖춘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했다. 중앙정부 계획과 어긋나는 구상이다.

용산역 정비장과 캠프킴 개발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울 공공주택사업의 핵심이다. 용산역 정비장은 1만 가구, 캠프킴엔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용산역 정비장은 당장 내년 3000가구가 사전청약(분청약보다 1-2년 일찍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측은 “주택 공급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정비장, 캠프킴 등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제는 공공주택 공급을 두고 갈등을 빚는 곳이 용산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에서만 노원구(태릉골프장), 마포구(서부면허시험장), 서초구(국립외교원·서울지방조달청) 등이 국토부에 공공주택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선 국토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공공주택사업을 모르고 있었다. 국토부가 보안을 이유로 공공주택 부지 선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소통 부족은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미 경기 과천시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줄다리기에 끝에 정부과천청사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철회됐다. 정부·여당은 과천청사 유휴지 대신 인근 과천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 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1300여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대체지도 찾기로 했다.

국토부는 △양호한 입지 제시 △기존 계획을 넘는 대체 공급 물량 제시 △지자체 협조 등을 주택 공급 계획을 바꾼 이유로 들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원칙이 충족된다면 정부는 (공공주택 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와 노원구는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 계획 변경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공급 물량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변경되면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체지를 구한다고 해도 부지 물색이나 공급 계획 수립 등에서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거둬드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수요자들이 ‘패닉 버닝’에 뛰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생각에 지자체, 주민과 사전 논의를 생략했던 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다양한 삶의 모양만큼
각자가 원하는 행복은 다르니까

무엇을 원하든 당신에게 딱 맞는 보장으로

더 두근거리는 매일을 마주할 수 있게
한화손해보험이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매일이
빈틈없이 행복하게**

LIFE PLUS 한화손해보험



접종 100일 만에 700만명, 이달 700만명 더 맞는다

국민 15% 백신 1차 이상 맞아
60세 이상 예약률 81% 기대 이상
美 공급 안센 국내 도착 수급 여유
이달 말 접종 배지·스티커 제공

100일을 맞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상황이 순조롭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상반기 접종 목표인 '1300만 명+알파(α)'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이 14만1000명 늘었다

고 밝혔다. 이 중 13만8649명은 1차 접종자, 2351명은 2차 접종자다. 누적 접종자(1차 이상)는 759만5072명, 인구 대비 접종률은 14.8%로 집계됐다.

상반기 접종대상 1217만8856명 중 접종 예약자는 1031만6348명이다. 이 중 272만1276명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7일부터 60~64세 311만7616명(예약자), 10일부터 30~59세 예비군·민방위대원과 국방·외교 관련자 89만2393명(예약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예약자의 접종률이 99.8%에 달해 일정대로라면 상반기 접종자 수는 1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백신 도입량도 충분하다. 5일 기준 국내

백신 잔여량은 아스트라제네카(AZ)가 519만6600회분, 화이자가 104만2200회분, 모더나는 5만4700회분, 안센은 101만2700회분이다.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 백신은 1·2차 접종자 병목으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매주 일정한 물량이 공급되는 만큼 접종 순위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다"며 "어제까지 전체 국민의 14.8%에 해당하는 76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60세 이상의 접종 예약률도 80.7%로 애초 기대치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예약하지 않았더라도, 60세 이상 국민은 19일까지 잔여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다"며 "근처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명단에 등록하거나, 네이버와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당일 잔여 백신을 예약해서 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6일 회의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급관리 계획'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가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재고량은 2일

기준 약 2억 정(캡슐)으로, 6월까지 예정된 예방접종 목표 인원(800만 명)의 예상 필요 수량인 8000만 정(1인당 10정 계산)을 충족할 수 있다.

7월 이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에 대비해 식약처는 제조업체의 생산량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예방 목적이 아닌 발열 등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만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모바일 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배려해 이달 말부터는 '접종 증명 배지·스티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배지·스티커 자체는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증명력이 없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돌아오라 유럽으로, 빗장 푸는 관광대국

EU, 韓·日 등 8개국에 관광 허용
역내 여행활성화 위해 '백신여권'
아시아선 태국 푸켓 재개방 나서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를 발판 삼아 여행에 대한 빗장을 풀기 시작하면서 올해 여름 휴가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행 재개에 대한 방침이나 관련 규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미 상당수 국가가 여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문호 개방 준비에 분주하다. 특히 유럽 관광대국들이 여행 재개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5일(현지시간) CNN이 소개했다.

유럽연합(EU) 소속 27개 회원국은 관광과 같은 비필수적 여행이 허용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등이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였는데 EU 집행위원회(EC)

주요국 여행 관련 규제 완화 조치
*출처: CNN

국가	규제 완화 조치
EU	- 내달 1일부터 백신여권 도입 -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일본 포함
프랑스	9일부터 아간통행금지 9시 → 11시로
스페인	7일부터 EU 역외 백신 접종 여행자 입국 허용
키프로스	미국·영국 포함 65개국 백신 접종 여행자 입국 허용
아일랜드	7월 19일부터 EU·영국·미국 백신 접종 여행자,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받고, 자가격리 후 여행 허용

는 3일 일본도 포함했다. 세계적인 관광지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3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형 유람선이 들어와 관광산업 재개 기대를 한껏 키웠다.

EU는 7월 1일부터 이른바 '디지털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 독일, 체코, 덴마크, 불가리아, 그리스,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 7개 회원국은 이미 이달 초부터 자

발적으로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EU는 역내 회원국에 입국 시 72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거나 48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받도록 권고해 왔다.

EU 회원국의 개별 움직임도 분주하다. 그리스의 경우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외국인 여행객이라면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9일부터 이른바 EU가 정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들과 유럽 회원국 등 '녹색' 리스트에 있는 국가의 여행객이 규제 없이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9일부터는 아간통행금지 시작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늦추고, 카페와 레스토랑 실내 영업을 허용한다. 30일에는 통금을 완전히 종료하고, 백신 여권과 같은 보건 증명서

소지자에 대해서는 1000명 이상 수용하는 대규모 행사 참여를 허용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유럽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했던 아일랜드도 규제 완화 방침을 정했다. 아일랜드는 다음 달 19일 EU 회원국과 영국, 미국인 여행객 대상으로 여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비(非) EU 회원국 여행객이면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도착 후 자가 격리를 해야 여행이 허용된다.

스페인인 7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은 EU 역외 입국자들의 여행을 허용하며 네덜란드는 '코로나19 위험이 낮은 안전한 국가' 리스트의 관광객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유럽 외에도 카리브해 세인트루시아와 알제리, 아부다비도 규제 완화에 나섰다. 태국도 대표 관광지 푸켓을 중심으로 여행객에 대해 재개방에 나선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변이종 집단감염 계속 거리두기 방침은 금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와 맞물려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보육시설, 종교시설, 일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잇따른 탓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56명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은 541명이다. 최근 1주간(집계기준) 일평균 확진자 수는 589.4명으로 직전 1주(547.1명)와 비교해 42.3명 늘었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가파르다. 6일 낮 12시 기준 감염경로별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화성시 유치원·어린이집(총 10명)과 대전 서구 호프집(총 13명), 중구 교회(총 15명), 광주 광산구 동전노래연습장(총 9명), 전남 화순시 카페(총 6명), 강원 횡성군 골짜기(총 9명)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특히 경북권은 변이 바이러스를 매개로 한 일반·유형주점발 집단감염이 'N차 전파'로 이어지면서 연일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질병청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유행이 지속하고 있고, 대구와 제주지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집단감염이 계속돼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가파른 확진자 증가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일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이 안정돼야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선제검사와 역학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방역조치를 제때 강화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항공·여행주 고공행진

대한항공 5월 이후 23% 급등
증권사 목표 상향 일부 신중론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속도를 내면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의 주가가 지난 달 이후 23% 넘게 올랐고,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강도 28.82%가 상승했다. 저비용 항공사(LCC)인 제주항공 역시 9.95% 강세를 보였고, 티웨이항공도 53.07% 급등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고사 직전까

지갔던 여행사들의 주가도 지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달 이후에만 하나투어가 32.32% 강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이전인 지난해 1월 최고가(5만6900원)를 훌쩍 넘어섰고, 모두투어(30.75%), 참좋은여행(40.52%), 레드캡투어(11.11%) 등도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호텔신라도 11.79% 상승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2.93%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은 두드러진다.

증권가 역시 이들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의 백신 1차 접종률

이 10%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수혜주로 언급되던 항공, 여행, 호텔, 카지노 등 산업군에 속한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서 "한국도 비슷한 흐름을 예상할 경우 관련 주식들의 주가 상승폭은 지금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증권사는 이미 알려진 호재로 오르는 것이라며 추격 매수에 신중을 주문하고 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이미 많이 알려진 호재"라면서 "변종 바이러스로 여행 수요 회복이 변동될 수도 있는 만큼 대한항공에 대한 목표주가를 40.9% 상향하지만 투자 의견은 HOLD(보유)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국내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달구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코로나19 사태로 된서리를 맞았던 항공주와 여행주가 백신 접종 본격화에 따른 '리오프닝'(경기재개) 기대감에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달 이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여행레저'의 수익률이 15.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ETF는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강, 여행사인 하나투어,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호텔·면세점 사업을 하는 호텔신라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이

“정부, 가상화폐 관리 무책임... ‘K코인’ 모형 찾아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은 부처 간 교통정리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인터뷰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안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 인터뷰를 진행했고, 시장 관리 방안이 나온 이후 서면 인터뷰가 한 번 더 이뤄졌다. 윤 의원은 두 번의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정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해 온 정부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관리 방안 교통정리 수준”=윤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시장을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했다. 주무 부처가 된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책임에서 발을 빼는 모습도 문제로 봤다.

윤 의원은 “(이번 발표는) 관리·감독은 금융위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는 등 책임을 분산·회피하려는 행태를 공식화한 부처 간 교통정리 수준에 불과했다고 본다”며 “금융위가 주무 부처가 아닌 주관부처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우면서 가상자산과 거리 좁히기를 애써 거부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 발표 이

지난달 발표한 ‘관리방안’ 미흡 은행 힘 빌려 거래소 정리하려 해 중소형 거래소 통폐합 운영하고 지원과 규제의 동시적 접근 필요

후 금융위가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을 주관한다”며 ‘주무 부처’가 아닌 ‘주관 부처’로 지칭한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윤 의원은 “(세미나 같은 행사를 하면) 주최자는 책임을 지지만 ‘주관’자는 단순 실무만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금융위가 주관부처 역할을 자처하며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가는 모습은 웬지 어색하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일찌감치 가상자산 거래 통제를 뒷전으로 미뤄 온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해 왔다. ‘3무(무책임·무대책·무방비)’로 일관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특히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정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들과 실명 계정을 맺지 못한 거래소는 사업 신고를 할 수 없고 폐업된다. 결국 거래소의 폐업 여부가 계정 발급의 주도권을 쥐 은행에 달린 셈이다. 4일 현재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건수는 0건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차도살인(借刀殺人)·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은행의 힘을 빌려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리하려는 것”이라며 “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규제 대상일 뿐이지 진흥 대상이 아니다 보니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관청은 중소형 거래소도 폐쇄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산업육성 대책 마련도 필요”=윤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행정 공백 상태

에도 우려를 표했다. 시장 감독을 위한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 부처가 여전히 시장과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의 개념과 정의, 대상, 규제 방향 무엇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행정공백’ 상태로 여러 의원이 각자 주장을 담은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폐쇄 위기에 처한 중소형 가

상화폐 거래소를 통폐합하는 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블록체인, 코인 기술을 결합해 관청은 중소형 거래소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면 중소형 거래소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가상자산 제도화와 함께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나 미국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지원과 규제의 동시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들 국가는 가상자산을 △지급결제수단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자산 등으로 분류·확정한 후, 자금세탁 등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특정 산업군에 포함한다. 동시에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규제하는 동시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한국형 ‘K코인’, ‘K가상자산’의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글/서지희 기자 jhsseo@

사진/고이관 기자 photoeran@

가상자산 시장 현황

가상자산 거래업자	60여개(5월 20일 기준)
거래소 가입자	581만 명(4월 말 기준)
4대 사업자의 평균 일거래대금	약 22조 원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중

가상자산 거래 부처별 추진업무

금융위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산업육성, 가상자산사업자 해킹 방지 등 지원반 운영, 가상자산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 등
검·경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 단속 등
공정위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개인정보위	거래참여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대응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준비,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등
관세청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

은행, 코인거래소 계약 연장 고심

새 고객 유치 등 장점 있지만 투자자 피해 책임 후폭풍 실명계좌 조건부 발급 검토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맺은 실명인증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할지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관리·감독에 대한 틀이 명확히 잡히지 않은 만큼 계약 연장을 선불리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은행들은 기존 계약 갱신 단위를 이전보다 축소하는 등의 조건부 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인원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 신한은행은 코빗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은행별 제휴 기한은 케이뱅크는 이달까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음달까지다.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에 은행과의 실명인증 계좌 제휴 계약 갱신은 필수적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실명계좌 등의 조건을 충족해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을 해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는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뿐더러 향후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선제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부산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고팍스와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면에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책임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위험성이 있다. 자금세탁 사고 등이 발생하면 결국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은 계약 연장에 따른 득과 실이 분명히 있는 만큼 계약 연장에 대해 세밀한 심사를 통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은행들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 확인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실사하면서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 특금법에서 요구되는 항목별 심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권에선 은행의 실명계좌 제휴 계약에 따라 거래소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은행이 신규 계약은 아니더라도 기존 계약은 연장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사적 영역에서 거래소의 존폐가 결정될 시 투자자 피해에 따른 후폭풍을 오롯이 은행이 감내해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6개월 단위 연장이 아닌 3개월만 연장을 한다는 등의 조건부 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비타민B는 역시 비맥스

자세한 설명은 약사님이 하신다.

강력한 피로 회복엔 비맥스 메타정

비스벤티아민 함유, 비타민 B군 100mg, B12 500µg 함유
 허가 및 제조권자: (주)한홍제약
 영안동제약
 광고심의일: 2021-1568-0040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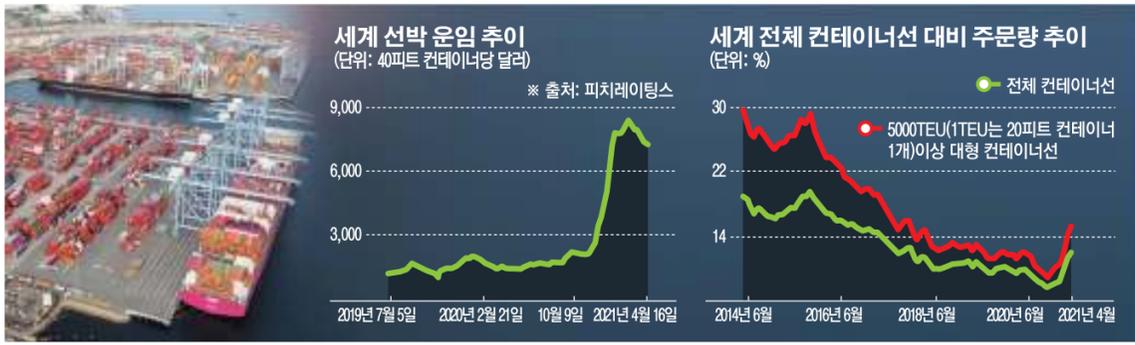
‘인플레 유발자’ 찍힐라, 호황에도 웃지 못하는 해운업계

물동량 급증 컨테이너선 태부족 수에즈 사태 등 운임 상승 부채질 침체기 우려 선박 건조 망설여 기업 인수 등 공급망 확보 총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전례 없는 물류 대란이 발생했다.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초기, 이동 제한으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컨테이너선들이 늘었다. 이후 예상을 넘어선 물품 수요 급증에 컨테이너선이 부족한 상황에 몰렸다. 전 세계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해운업계는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속내가 편하지 않은 않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해운업계 상황은 1년여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1년 전 중국 공장들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해운업체들은 운항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컨테이너 허브인 싱가포르 항구에는 정박한 컨테이너선이 늘어났다.

상황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역전됐다. 코로나에서 탈출한 중국이 생산을 정상화



하면서 공장들이 밀려 있던 주문을 소화, 물류 수요가 급격히 회복되면서다.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 변화도 물류 증가를 부채질했다. 코로나 여파로 집에 머물게 된 사람들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한 것이다. 중국산 전자제품과 소비재 수요가 치솟았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20%가량 증가했다. 이외에도 아시아 항구에 정박한 컨테이너들은 요가 레깅스, 튀김 기계, 잔디 깎는 기계까지 운송 대기 중인 상품들로 꽉 찼다. 화장지 제조업체 매출은 2주 만에 7배 늘었고 1년치 재고를 두 달 만에 판매 종료하는 업체들이 속출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이후 미국 최대 항만

시설인 로스앤젤레스(LA)항과 롱비치항에 컨테이너선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올 1월에는 미국 두 항구에서 하역을 기다리는 선박이 30척을 넘어섰다.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를 소화할 컨테이너선이 부족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선박 생산이 35% 감소한 여파다.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확대된 선박 크기에 비해 이를 수용할 항구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병목현상을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화물 운임의 끝없는 상승을 초래했다. 올 초 미국 텍사스주 한파와 3월 에버그린호의 수에즈운하 좌초 등 악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물류대란과 운임 고

공행진에 기름을 부었다. 에버그린호가 좌초된 6일 동안 추산된 손해액만 하루 96억 달러에 달했다.

글로벌 해운컨설팅업체 드류리에 따르면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새 4배가량 뛰었다. 사이먼 헤니 드류리 수석 애널리스트는 “공급망 혼란, 운임 급등 등 모두 그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며 “지난 20년간 이 정도의 혼란을 겪었던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선박 물품이 예정대로 도착했는지를 나타내는 신뢰성은 1월 34.9%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해운업계가 물동량이 늘어난 상황을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경기회복 둔화 등 역효과가 커질 수 있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경기 수요가 급속히 개선되는 것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높아져 세계 경제 회복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황기라고 선박 건조에 공격적으로 나섰다 침체기가 오면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10년간 지속했던 암흑기가 대표적 사례다.

이에 해운업체들은 더 많은 ‘블랙스완(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례적인 사건)’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화물 운송업체와 창고 운영사 등 다른 공급망 기업 인수에 나섰다.

세계 5위 컨테이너 선박회사인 하파그 로이드는 지난달 아프리카 항로에 잠정이 있는 컨테이너선사 나일더치를 인수했다. 지난달 프랑스 선사 CMA CGM은 유럽과 북미 사이를 비행하는 4대의 에어버스 항공기를 구입했다.

세계 1위 해운업체 머스크는 지난해 미국의 재고 유통 관리 전문기업인 퍼포먼스 팀과 KGH 커스텀 서비스를 인수했다. 운송과 서비스 부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IT서 ‘물류대란’ 해법 찾는 기업들

재고 추적 등 AI 도입 비용 절감 블록체인 통해 문서 작업 간소화 자율운송 기술도 상용화 테스트

전 세계 기업들이 최첨단 IT 기술로 물류대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 물류업계가 가장 먼저 주목한 기술은 인공지능(AI)이다. A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공급망 본연의 복잡성과 프로



볼보의 자율주행 전기 트럭 베라.

세스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AI 기

술은 이미 해운과 물류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빠르게 침투해 필수 기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운송 속도 향상과 원활한 재고 추적, 이를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 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미 AI의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는 기업 경영진이 늘어나고 있다. 컨설팅업체 맥킨지 설문조사에서 경영진의 61%가 AI 기술을 공급망에 도입한 결과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응답했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한 경영진은 64%였다. 이와 관련해 IT 전문매

체 테크톡스는 물류 부문에서 AI 기술을 접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AI 기술 채택 분야를 넓히고, 관련 기술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 기술도 물류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다. 스웨덴 자동차기업 볼보(Volvo)는 전기 트럭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 대형 화물의 단거리 운송 프로젝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볼보는 AI 개발업체 엔디비아를 비롯해 물류 회사 DFDS와 항구운영업체 APMT미널과 협력하고 있으며 스웨덴 예테보리 항구 지역에서 자율운송 기술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볼보의 닐스 예거 자동화솔루션 사장은

“자율운송은 물류의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생산성과 안전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산업은 물론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예테보리를 시작으로 전 세계 다른 항구에서도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상화폐 기술로 알려진 블록체인의 경우 암호화와 함께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을 통해 거래를 기록해 악의적이고 임의적인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을 물류 프로세스에 적용하면 이제까지 운송에 수반됐던 이메일과 전화통화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조작될 가능성이나 착오 가능성을 차단해 물류의 안정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모두가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세계로 이어진 30년.

세상 모든 아이들 편에서 함께한
모두가 굿네이버스입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K-그린이 혁신이다

SK이노베이션의 한걸음 한걸음이
K-그린의 위대한 길이 되도록

최고로 안전하고 가장 멀리 가는
친환경 배터리로 세계를 달립니다
환경을 위협하는 '탄소발자국'이
지구에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세계를 놀라게 할 **K-그린**,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그 시작을 함께 합니다

Hi K-Green *Hi*!Innovation

〈일시적 경기 후퇴〉

“한국 경제 회복 속 하반기 ‘소프트패치’ 가능성”

한국 경제가 빠르게 경기 회복 국면에 안착했지만, 하반기 소프트패치(Soft Patch·경기 회복에서 겪게 되는 일시적인 경기 후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식으로 정책 기조를 변경할 경우 신용 시장의 긴축 발작과 국내외 인플레이션 충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회복 강화 속 소프트패치 가능성 우려” 보고서를 발표하고 “2분기 한국 경제에선 수출 및 제조업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고 내수 부문도 빠르지는 않지만,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4월 이후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1분기에 이어 4월에도 소매판매 증가율이 2%대를 유지하며 선방했고, 설비투자 부문도 비(非) ICT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 경기와 수출 부문도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수출 경기의 경우 5월 전년 대비 수출 물량이 45.6%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같은 달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5.2를 기록하며 지난

현대경제연구 “美 조기 테이퍼링엔 신흥국 긴축발작·인플레 가속”
 코로나 상황·백신접종 속도 관련 “출구정책 마련·물가 억제 필요”

3월(100.5) 이후 기준치 100을 3개월 연속 웃돌고 있다.

연구원은 향후 경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코로나19 상황과 백신접종 속도 △국내외 금융시장의 긴축발작(Taper Tantrum)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실화를 꼽았다.

연구원은 “최근 미국 실물 경제 지표의 호조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고, 통화정책 정상화(출구전략)의 첫 번째 단계인 테이퍼링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3년 5월 연준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국내 물가도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여, 물가 불안(inflation)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2분기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기에 진입했지만, 하반기 소프트패치를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원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이 발현될 경우 경기 회복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가 이러한 하방 리스크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출구정책 마련 △수출 경기 확장을 위한 차별적인 시장 접근 전략 기획 △신용시장 긴축발작에 대비한 대응 능력 확충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 억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LG전자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5일부터 이달 말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광장에 있는 LG전자 전광판에서 유엔환경계획이 제작한 환경보호 캠페인 영상을 상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타임스스퀘어 전광판. 사진제공 LG전자

32兆 추가세수로 추경 “일부 나랏빚 갚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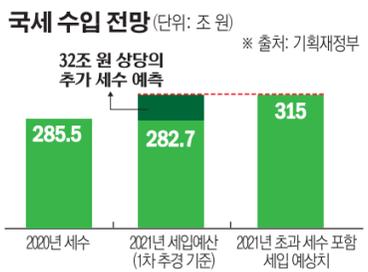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 가능 추경규모 25兆 내의 인플레 유발 우려... 재정건전성 급격한 악화 막아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추경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추경 편성에 활용할 방침이다. 추가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더 견딜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이다.

연간 초과 세수 규모는 아직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조 원 늘었지만, 여기에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거저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국세수입은 전년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실적 악화,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 원 줄었다.

최근 세수 상황과 올해 경기 전망을 고려할 때 당정은 올해 32조 원 수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안은 7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전망,



추경 규모·시기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대략적인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추경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방교부세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 가능한 추경 규모는 25조 원 내외다. 홍 부총리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 등 재난지원금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5조~2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재정은 지급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이다. 피해계층 지원에는 올해 1차 추경에서 8조1000억 원이 쓰였다. 2차 추경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큰 변수는 일반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다.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한정하면 9조7000억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12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개인별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소요재정은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을 넘어선다. 기재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어서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네 차례, 올해 한 차례 추경 편성으로 급속도로 악화한 재정건전성도 골칫거리다. 이런 맥락에서 재정 여력이 생겼을 때 나랏빚을 일부라도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마저 국제유가 상승, 농축산물 수입 불안 등 공급측 요인이 주로 반영된 수치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수요가 늘면, 또 다른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안경덕 “산재 반복 땀 고강도 제재 안전관리 부실 기업, 사업도 못하게”

중대재해법 이르면 이달말 입법예고

안경덕(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관리를 못 하면 사업도 못 한다”고 언급하며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기업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안 중요한 게 없지만,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7일 취임한 안 장관은 첫 번째 목표표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꼽았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자 대표와 전문가 등의 안전 확인을 거쳐야만 이를 해제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하는데 비용 절감과 효율성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안전 보장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철저히 하게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도 준비 중이다.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의 막바지 단계로, 노사의 견수령 등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디지털·저탄소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청년의 대기업 선호에 따른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비농업 청년도 ‘스마트팜’ 관심 후끈

창업보육센터 경쟁률 3대1로 ‘쑥’

미래농업으로 주목을 받는 스마트팜에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208명 모집에 625명이 지원해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쟁률은 2.1대1이었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전북 김제와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8월 말부터 이론교육 과정 2개월, 교육형 실습과정 6개월, 경영형 실습과정 1년으로 최대 20개월 동안 진행된다.

보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 우선 입주(3년·수행실적우수자), 최대 30억 원의 스마트팜 청년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부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90%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교육 신청자의 평균 연령이 30.3세로 지난해 31.5세보다 1.2세 낮아졌고, 컴퓨터공학, 경영학 등 농업 전공 외의 비중도

지난해 76.6%에서 84.3%로 높아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농업 분야 청년들이 미래·첨단농업인 스마트팜을 유망 직종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희망 품목도 지난해 딸기와 토마토, 엽채류 위주에서 올해는 멜론, 오이,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 등으로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기초지식부터 농장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을 배울 수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강사와 커리큘럼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2018년 교육을 시작해 2020년 6월에 수료한 45명 중 38명은 창업, 4명은 스마트팜 선도농장에 취업했다. 2019년 선발한 2기와 지난해 선발한 3기 교육생은 현재 실습과정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3일까지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文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송구”

현충일 추념사에서 처음으로 사과
“한반도 비핵화·평화 위해 큰 걸음”
與,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이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군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피력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이 잇달아 현충일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한반도 정세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민 대변인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멈춰섰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진전시

켜 나가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실현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한미정상회담을 자화자찬하며 북한 바라기와 중국몽을 이어가려 한다”며 “잇따른 군내 성 비위 사건과 부실급식 등의 문제로 마음 놓고 자식을 군에 보내기도 두려운 오늘의 대한민국은 호국영령들 앞에서 고개를 들기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방명록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는 등 사실상의 정치 행보를 보여 대권 도전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인사 나누는 宋·金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6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인단 확보가 승패 좌우” 與대권 ‘빅3’ 조직망 총동원

친문진영 ‘빅3 캠프’로 각자도생

이달 말 예비경선이 끝나면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여권 잠룡들은 남은 한 달여 동안 조직 ‘영광’에 나설 전망이다. 경선에서는 당원이나 일반 선거인 모두 동등한 1표를 행사한다. 기존 70만 명~80만 명의 권리당원에 더해 각 캠프가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는지가 승패를 결정지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의 최대 주주인 ‘친문’ 진영도 각자 도생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거나 친문계 의원도인 ‘민주주의 4.0’ 소속 인사들이 민주당 대선후보 ‘빅3’ 캠프로 각각 지원사격에 나섰다.

청와대 출신의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돕는다. 친노·친문 좌장 격인 이해찬 전 대표 측근인 김성환 이해식 의원도 민주당 평화광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낙연 전 대표를 돕는 청와대 출신은 정태호 운영찬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정부실장을 지낸 김영배 최고위원도 우군으로 꼽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돕는 청와대 출신으로 강기정 최재성 전병헌 전 정무수석 등 ‘정무수석 3인방’이 꼽힌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준석 바람 아니다, 당대표 확실” 국민의힘, 벌써 내년 대선 상승효과 기대 2030 이어 중장년도 지지 ‘태풍급’ 격상

“이준석 당 대표 후보 상승세는 바람이 아니라 당선확실이다.”

국민의힘 전 중진위원의 전언이다. 이 후보는 30대 나이로 나경원·주호영·조경태·홍문표 등 중진들을 제치고 1강 당권 주자를 달리고 있다. 이에 당에서는 이미 당선은 확실하다고 보고 내년 대선을 향한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가장 최근인 3일 발표한 알앤씨 여론조사(1~2일 만 18세 이상 1044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0%포인트) 상 이 후보는 46.7%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9일 공개된 PNR리플네트워크리서치 여론조사(지난달 8일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13.9%로 등장한 뒤 수직 상승한 결과다. 2위를 달리는 나 후보는 제자리걸음을, 3위 주 후보는 내리막 길을 걷는 동안 격차가 계속 벌어졌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준석 태풍’의 주역은 4·7 재보궐 선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6일 울산시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사를 방문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과 마찬가지로 20~30대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이 후보가 과거 사회 현안에 대해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들이 회자되며 공감대를 얻고,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재조명돼 친근감까지 생겨났다. 실제 알앤씨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20대와 30대에서 49%·49.3% 지지를 얻은 반면 나 후보는 각기 13.5%·15%에 그쳤다.

여기에 중장년층도 이 후보에 손을 들어 주면서 2030이 일으킨 돌풍이 태풍으로 격상됐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4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41.2%, 47.1%, 47.3%로 2030 못지않게 경쟁 후보들을 압도했다. 중진 후보들은 이에 전 당대회 탈락 당원 투표 비중이 70%인데 기대를 걸지만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에 국민의힘이라고 답한 이들 또한 이 후보 지지율이 57.7% 나 후보(20.7%)를 크게 따돌렸다.

새 당 대표가 이미 정해졌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이유다. 한 전직 중진 의원은 “이 후보 당선은 이미 정해진 분위기다. 2030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서 지지율이 압도적이고, 각 당협에서 자체적으로 한 조사들도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선까지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끌고 갈 거라는 희망도 크다. 2030 지지를 등에 업은 데다 청년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 후보이기에 대선 국면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이 후보는 6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을 누가 대적할 거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재미

공감

품격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짬짬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짬짬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짬짬 TV)

G7 “빅테크 세금구멍 차단” 현실화까진 곳곳 난제

美 재무장관 “역사적 성과” 자평 ‘낮은 세금 수혜’ 아일랜드 반발 국가 확대·디지털세 유지 등 숙제

주요 7개국(G7)의 최저 법인세율 합의 소식에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종식하고 IT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사용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다만 합의 대상이 주요 20개국(G20)으로 확장돼 본격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아일랜드 등 낮은 세율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던 국가들의 반발도 해결해야 하는 등 실현에 이르기까지 난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주요 외신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을 내놨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5일(현지시간)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합의는 장기적인 치유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수십 년 간 이어온 세율 인하 경쟁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한발 나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로 포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8년간 이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중단됐다”며 “이번 합의는 역사적 성과이자 우리의 다자간 협력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합의는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증세 정책과 맞물린다. 미국 CNBC방송은 이번 합의로 바이든 정부가 유럽에서 중요한 정치적 위치를 선전했다고 긍정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실현을 위한 과제

는 여전히 많다. G7에 한정된 합의인 만큼 향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국가들도 설득해야 한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역시 회의 직후 세율 인상 폭에 관한 취재진의 물음에 “이제 첫 단계다. 여전히 G20으로 가기 위해 더 많은 그룹과 합의를 해야 한다”며 “최종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10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비슷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이제 G7의 1차 목표다.

아일랜드처럼 낮은 세금 정책을 통해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던 국가들은 이번 합의에 불만을 품고 있다. 아일랜드는 그동안 12.5%라는 낮은 법인세율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의 유럽 본사 유치에 성공했다. 아일랜드 현지 매체 아이리스타임스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연간 법인세 수입은 120억 유로(약 16조 원)에 육박하며 재무부는 이번 합의로 20억 유로 이상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세 논란도 남았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세 폐지를 주장했지만, 해당 세제를 도입한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합의가 완료돼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버텼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 과정은 최대 4년이 걸릴 수 있다.

합의된 세율 기준이 여전히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은 “G7은 아일랜드와 싱가포르, 스위스와 같은 조세회피처에 부여되던 세율과 유사한 기준을 설정했다”며 “(최저세율이) 너무 낮은 만큼 기업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중 보란 듯...美, 대만과 ‘백신외교’ 대만을 방문 중인 미국 상원의원들이 6일 타이베이에서 차이잉원(왼쪽 네 번째) 대만 총통과 회담하고 있다. 댄 셸리번(첫 번째), 테미 더크워스(두 번째), 크리스 쿤스 등 상원의원 3명은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 후 대만을 방문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대만에 75만 회분의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베이/AP연합뉴스

중국 IT기업 규제, 홍콩 IPO까지 찬물

‘알리바바 때리기’에 투자심리 위축, 기업공개 2009년 이후 최저

중국 정부의 ‘IT 기업 때리기’가 이어지면서 홍콩 기업공개(IPO) 시장도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분기 들어서 현재까지 홍콩증시에서 IPO를 한 기업은 7곳에 그친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올 들어 지금까지 홍콩증시에서 IPO로 조달한 자금은 약 239억 달러(약 27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이다. 그러나 미국 나스닥거래소는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열풍으로 금액 면이나 건수에서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

홍콩증시는 IPO에 나서는 기업이 많지 않을뿐더러 올해 증시 데뷔에 나선 기업들의 첫날 주가 성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IPO를 실시한 참고·물류업체 JD로지스틱스다. 이 회사의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홍콩 증시 상장 첫날 56% 급등했던 JD닷컴

홍콩증시 기업공개(IPO) 수 추이



의 또 다른 자회사인 JD헬스와 비교하면 크게 뒤쳐진 성적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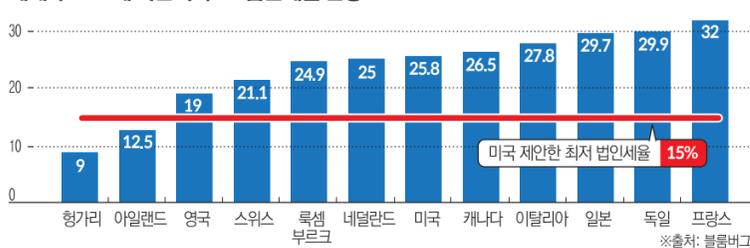
이처럼 홍콩 IPO 시장이 때아닌 혹한기를 맞게 된 것은 중국 당국의 고강도 규제에 투자심리가 크게 냉각한 영향이다. 중국 반독점 당국은 알리바바그룹홀딩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34개 IT 기업에 대해서도 독점 행위를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이제 시작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3대 IT 기업으로 꼽히는 텐센트홀딩스와 알리바바, 메이탄은 시가총액이 4개월 전 고점 이후 총 4000억 달러 이상 증발했다. 홍콩 소재

웰시증권의 루이스 체 전무이사는 “투자자들이 더는 중국 기업들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부 개입으로 일부 기업들은 주식 공모 관련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IPO 시장이 부활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데뷔 예정인 기업들의 성과에 달려 있다. 홍콩 최대 차이고정기 제조업체에 인접열린테크놀로지사가 IPO를 앞두고 있다. 중국 2위 게임사 넷이즈 산하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넷이즈클라우드뮤직도 상장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자산운용사 에버브라이트순흥 카이의 케니 원 전략가는 “시장 분위기를 되살리려면 최소 2~3개의 블록버스터 IPO가 필요하다. 공모율과 상장 첫날 성적이 시장을 놀라게 할 필요가 있다”며 “홍콩 IPO 시장의 봄날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세계 주요 조세 피난처와 G7 법인세율 현황 (단위: %) ※2020년 기준. 중앙과 지방정부 합산



바이든, 시진핑과 무역전쟁 시동 USTR “G2무역 증대한 불균형”

중국 블랙리스트 59곳으로 확대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시동을 걸었다. 공개적으로 미·중 무역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 장관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기존 무역협정을 유지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세계 양대 경제국 사이의 무역 관계에 중대한 불균형이 있으며, 바이든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경제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준 일부 무역 거래가 있다”며 “우리는 미·중 무역 관계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타이 대표는 바이든 정권 들어 처음으로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전화 회담을 했다. 당시 중국 측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고 미국 측은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날 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정책에 대한 지속성을 존중한다고 밝혀 당분간 대중 무역 정책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근 바이든 정부의 대중 압박 수위는 높아지는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회웨이와 3대 이동통신사 등 중국 회사 59개사에 대한 미국인과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체 기업 수는 트럼프 정부 시절 48곳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

제재 기업에는 중국 군사 대기업으로 알려진 에비에이션인더스트리와 인권 탄압으로 논란이 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감시 카메라를 제공한 항저우하이테크비전 디지털테크놀로지사를 비롯해 항공, 조선업체 등이 포함됐다. 대중 정책에 있어 경제와 인권 모두를 압박하는 바이든 정부의 맥락과 같다.

블룸버그는 “월가와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추구해왔다”며 “다만 이러한 정치·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동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엘살바도르,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 추진

부켈레 대통령 “관련 법안, 다음 주 의회 제출” 금융 시스템 혁신

중미 반국 엘살바도르가 가상화폐 대명사 비트코인을 통한 금융 시스템 혁신을 추구한다.

5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사진)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날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하는 법안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식 경제 밖에 있는 수많은 시민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켈레 대통령은 “디지털 지급 앱 스트라이크(Strike)와 파트너십을 맺어 비트코인 기술을 통한 엘살바도르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권당인 ‘누에바사데아사(Nuevas Ideas:새로운생각)’가 의회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3월 엘살바도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스트라이크의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잭 말러스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큰 비자산이자 탁월한 통화 네트워크”라며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충격에서 개발도상국들을 보호할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엘살바도르는 디지털 화폐를 법정통화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통합된 공개 결제 네트워크

를 제공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엘살바도르는 2001년 미국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인정하면서 자체 통화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의 약 70%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다. 이 주민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자금은 엘살바도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일반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때로는 해외 송금에 10% 이상의 수수료가 붙고 돈을 받는데 며칠이 걸리거나 심지어 물리적 픽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부켈레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점들을 언급하면서 “포용적 금융은 도덕적 의무이며 신용과 저축, 투자와 거래 보호를 제공해 엘살바도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하나금융그룹은 ESG 실천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두와 하나가 되겠습니다

- 2030년 60조 ESG 금융지원 및 조달
- 2050년 사업장 탄소배출량 ZERO 달성
- 2050년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스 ZERO



은행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재개 저조 수익 감소 우려

**녹취·숙려 제도 시행 한 달
하나·농협 일부 상품 영구 중단
금소법까지 펀드영업 악화일로**

은행권이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녹취·숙려 제도가 도입되면서 중단했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속속 재개하고 있다. 다만 판매 재개율이 24%에 불과해 은행이 아직 고난도 금융

투자상품 판매의 준비를 완벽히 마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NH 아문디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 등 7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 NH농협은행 역시 'KB스 타코리아레버리지2.0증권투자신탁' 등 11개 상품의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중 고난도 금융상품 5종에 대해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고난도 금융

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2영업 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위해 은행이 투자설명서 등에 담아야 할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이 제도 시행 일주일 전에서야 고시되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94개(중복 포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를 중단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판매를 중단한 상품 중 재개하거나 재개 예정인 상품은 23개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금융권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점차 위축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이미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에선 일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현상은 은행의 수익성 감소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도

축소될 우려가 크다. 아직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를 재개하지 못한 은행들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재개할지, 혹은 영구 중단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설명서를 보완하고 이사회까지 거쳐야 해 판매 재개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금소법까지 시행되면서 은행의 펀드 판매 여건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신임 금감원장, 이상복·원승연 교수 2파전 양상

**공석 한달째 이번주 발표 관심
노조 "교수 출신 후임자 반대"**

새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주에 발표될지 이목이 쏠린다. 윤석현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7일 퇴임한 후 금감원장 자리가 한 달째 공석인 만큼 후임 결정이 더는 미뤄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임 금감원장 유력 후보로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꼽힌다. 당초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석우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함께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근에 이



이상복 서강대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교수와 원 교수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이 교수는 변호사 출신(사법시험 38회)으로 2013~2015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증권분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원 교수는 교보약사자산운용 상무이사과 신한BNP파리바자산

운용 상무이사를 거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지냈다. 원 교수는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이재민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과 같은 '학현 학파'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직이 제정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인 윤 전 원장에 이어 후임자도 교수 출신이 유력하게 꼽히자 금감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 노조는 '깎대기는 가라, 교수는 가라'라는 성명서를 내 "문재인 대통령이 금감원을 진정으로 개혁하길 원한다면 교수 출신 원장이라는 욕심을 꺾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수 출신 수장에 대해 정무감각

이 떨어지고 금융업계와 소통·조율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했다. 윤 전 원장이 사모펀드 사태를 정리하면서 금융사 징계에 집중해 업계와의 소송전이 이어졌고 이때문에 금감원의 지도권이 실추됐다는 것이다. 이에 학계 출신이 아닌 금감원 내부 출신이 원장에 오를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전 원장이 10년도 더 된 키코(KIKO·Knock-In Knock-Out) 사태를 다시 들춰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행했을 때 금감원이 무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이번에 또다시 학계 출신이 온다면 금융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카뱅 주식 계좌 서비스 2년 만에 400만좌 개설

카카오뱅크는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주식 계좌 수가 2년 만에 400만좌를 넘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주식 계좌는 서비스 첫해인 2019년 9개월 만에 114만 좌가, 다음 해엔 186만 좌가 개설됐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17만 좌가 새로 개설됐다.

카카오뱅크의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지난해 NH투자증권과 KB증권으로 확대됐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 개설 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증권사는 카카오뱅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위탁거래수수료 우대, 개설 축하금 지급 등 차별화된 고객 혜택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식계좌 개설 가능 증권사를 연내에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며 "고객 중심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신한은행, 음식 주문 플랫폼 만든다

신사업 전담 O2O 추진단 신설

신한은행은 금융을 뛰어넘어 고객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비금융 신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O2O 추진단'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 고객에 한정된 접속자

수와 금융거래를 위한 접속 목적 등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가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은행이 직접 플랫폼을 운영해 금융-비금융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O2O 추진단'을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O2O 추진단'을 새롭게 만들면서 전통적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각종

레거시(Legacy)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에 집중했다.

플랫폼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상품 소싱, 리스크 관리 등은 전문성 있는 은행의 기존 자원을 활용해 신설과 동시에 전격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구축 후에는 서비스 확장 및 플랫폼 개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ICT 인력을 독립 배치할 계획이다.

'O2O 추진단'은 향후 인력, 예산, 시스템, 인프라 등이 완벽히 분리된 CIB(Company in Bank)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로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인가 받은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구축을 전담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O2O 추진단"은 금융과 비금융을 연결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진옥동 은행장의 의지에 따라 신설됐다"고 말했다. 박찬신 기자 jinsan@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대중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장비의 보유는 서비스 보유는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 회계관리
- 기업전용 메신저
- 화상회의
- 메일
- 전자결재
- 웹오피스
- 인사관리
- 내PC 원격접속
- 웹스토리지
- 팩스
- 거래처관리
- 명함관리
- 조직도
- 문서협업솔루션
- 할일관리
- 일정관리
- 노트
- Tedge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청구, 웹툰, 도메인)

車업계 ‘하투’ 핵심 키워드 ‘성과급·투자계획·정년’

전금노 현대차·기아·한국지엠
임금 9.9만원 인상 공동 요구
투자계획 확정 후 고용 보장 촉구
정년 만 64세 연장 노사 진통 예상

완성차 업계 노조 요구안 ※ 출처: 각 사 노조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임금	9만9000원 인상			7만1687원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 30%	영업이익 30%	통상임금 150% +격려금 400만 원	700만 원
기타	정년 연장 국내 고용 보장, 국내 투자 계획 제시		부평 2공장 신차 배정, 미래발전계획 제시	발전기금 12억 원 출연, 휴가비 인상

완성차 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약 하계 교섭을 뜻하는 ‘하투(夏鬪)’가 본격화했다. 올해 교섭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투자계획, 정년연장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모두 간단치 않은 안건이라 노사 간 첨예한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완성차 업계 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거나 요구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와 한국지엠(GM) 노사는 지난 달 상견례를 갖고 교섭을 시작했고, 기아 노조는 사측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발송한 상태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사측과의 갈등으로 1년 넘게 지난해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하며 대표노조가 교섭권을 잃었다. 교섭 대표 노조를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임단협 재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지부는 임금 9만9000원 인상을 공동 요구안에 포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임금을 동결한 만큼,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임금 인상과 함께 현대차 노조는 성과급으로 당기순이익의 30%를, 기아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통상임금 150%에 해당하는 성과급과 코로나19 격려금 400만 원 지급을 요구안에 넣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조합원의 문제의식이 교섭에 반영

될지도 관심사다.

현대차그룹 사무·연구직은 대표노조가 생산직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복수노조인 ‘현대자동차그룹 인재존중 사무연구직 노동조합(사무직 노조)’을 설립했다. 사무직 노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무직 노조는 정의선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현대차그룹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교섭권이 대표노조에 있음을 명확히 함에 따라 대표노조 입장에서는 이번 교섭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MZ세대와 사무·연구직 조합원을 어떻게 달래고, 안고 갈 것인지 고민이 많다”라며 “당장 이해할만한 성과급이 주어지도록 하겠다. 연구 직무에 있는 조합원에게 걸맞은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도입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사측을 압박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국내 투자 계획 확정과 정년연장 등 고용과 관련한 안전도 핵심

의제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기아 노조는 최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미국 투자 계획을 교섭 테이블에 올려 문제 삼을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8조4000억 원(74억 달러)을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현지에 전기차 생산능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사 노조는 미국 투자보다 국내 고용 보장을 위한 특별협약을 먼저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군산공장 폐쇄를 경험한 한국지엠 노조도 부평 1, 2공장과 창원공장의 구체적인 미래발전 계획을 확정해 알려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의 생산 일정이 잡히지 않은 부평 2공장에 전기차 등 신차를 투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 역시 또 다른 쟁점이다. 금속노조 산하 3사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절대 불가 뜻을 고수하고 있어 교섭에 진통이 예상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쌍용차 자구안 투표’ 노조의 선택은?

기술직 50%·사무직 30%
무급 휴직안 내일 결과 발표
‘청산·존속’ 법원 판단 촉각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가 첫 단추인 ‘자구 계획안’을 놓고 조합원 투표에 나선다. 이 과정을 넘어서도 이달 말에는 또 하나의 고비가 남았다. ‘청산 또는 존속’이라는 법원의 결정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쌍용차는 7일 오전 7시 부채자(휴가 및 외근 근로자)를 시작으로 자구안 찬반 투표를 시작한다. 결과는 투표 둘째 날 오후에 나온다. 기술직 50%와 사무직 30%에 대한 무급 휴직이 자구안의 골자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인적 구조조정이

빠진 반쪽짜리 자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쌍용차 매출은 2조9000억 원 수준, 회사 임직원 규모만 4700명에 달한다. 이보다 매출이 더 많은 르노삼성(약 3조4000억 원) 임직원도 약 4000명 수준. 쌍용차 임직원이 르노삼성보다 오히려 18%나 많다.

반대로 쌍용차가 그동안 보여준 혁신적 노사문화를 고려하면 “인적 구조조정은 가혹하다”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자동차 업계는 물론 조합원 내부에서도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자구안 투표부터 부결되면 향후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정부 지원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법원의 회생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물론, 투표결과 가결이 돼도 넘어야 할 현안이 줄지어 있다.

현재 회계법인으로 꾸러진 조사위원회가 쌍용차의 청산 또는 존속(매각) 가치를 저울질 중이다. 조사 보고서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 법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쌍용차의 청산 또는 매각을 결정한다.

매각이 결정되면 쌍용차는 즉각 매각 주간사를 선정한다. 이후 △인수자의향서 접수 △에비 심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0월 말) 등을 진행한다. 고비가 줄줄이 이어지는 셈이다.

쌍용차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2018년 최종식 대표 재임 시절, 사실상 정부의 압박에 밀려 해고자 복직을 무리하게 결정했다”라면서 “정부는 ‘고용 확대 정책’으로 포장만 했지만 회사에 대한 지원에 인색했다. 사회적 가치를 따져주길 바랄 뿐”이라고 성토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전기차 충전소·드론 배송·물류 거점 주유소의 ‘무한변신’

미래형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차량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박차

정유소가 주유소를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드론 배송, 물류 거점에 더해 전혀 새로운 모습의 주유소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6일 GS칼텍스에 따르면 최근 회사는 ‘미래형 주유소 및 주유소 기반 수소 드론 배송 시스템 개발(사진)’ 해커톤을 모집했다.

미래형 주유소 아이디어 시제품을 제작하고, 주유소 거점 드론 배송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행사다. 9일까지 자율 제작을 진행한 뒤 10~12일 본행사를 열 예정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는 이제 기존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물류,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게 됐다”며 “정유사들이 새로운 공간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를 비롯해 SK에너지,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은 주유소를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공간으로 바꾸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SK에너지의 주유·차량관리 플랫폼 ‘머핀’은 주유소 손 세척뿐만 아니라 출장 세차, 아파트 단지 내 세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주유소 480여 곳에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주차대행, 자동차 정비·보험 등 다른 차량관리 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SK에너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분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에쓰오일도 곧 주유·차량관리 서비스 플랫폼 ‘유래카(油來Car)’를 출시한다. 유래카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주유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다. 타이어 구매·장착 서비스도 예약할 수 있다. 그밖에 주차장 예약, 도심 주차대행, 손 세차, 대리운전 호출 등 차량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쿠팡과 협업해 특정 시간대에 주유소의 남은 공간을 로켓배송 물류센터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50여 곳까지 거점을 늘릴 계획이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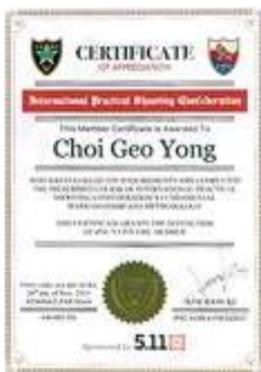
삼성SDI 임직원 “이색 취미로 ‘코로나 블루’ 날려요”

일러스트 재능 기부·사격 스포츠
사내 ‘일상다반사’ 캠페인 눈길

삼성SDI는 6일 임직원들의 취미를 소개하는 ‘일상다반사’ 캠페인을 소개해 관심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안전하고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임직원을 소개해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이다. 이 캠페인은 삼성SDI 사내 소통채널 ‘SDI talk’을 통해 월 1회 진행된다.

현재까지 ‘일러스트 그리기’, ‘실전 사격 스포츠’, ‘가구 제작’, ‘혼라이딩(혼자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진 임직원들의 사연들이 소개되어 큰 이목을 끌었다.

일례로 기흥 본사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근무하는 황예슬(32) 프로는 수준급의 그림 실력을 선보였다. 황 프로는 평소에도 동료들의 가족사진, 웨딩 사진을 일러스트로 그려 선물해왔다고 한다. 황 프로는 엄마가 즐거우면 아이도 즐거울 것이라 생각으로 ‘태고’ 목적으로 일러스트를 시작하



최거용 프로의 자격증과 사격 모습.



사진제공 삼성SDI

게 됐다고 소개했다.

울산사업장에서 배터리 품질 안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최거용(40) 프로의 ‘실전 사격 스포츠’ 취미도 소개됐다.

실전 사격 스포츠란 실탄을 이용한 권총, 소총, 샷건, 에어 소프트 건 등을 사용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는지 기록을 겨루는 스포츠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IPSC(국제 실용 사격 연합)로부터 정식연맹국으로 승인받았다. 최 프로와 같이 실총 사격 자격을 갖춘 선

수는 국내 단 36명에 불과하다.

실총 사격 자격을 획득했지만 코로나19로 대회 참가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언급한 최 프로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 해외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SDI에서는 이러한 캠페인 외에도 전 임직원들의 정기 심리검사 및 상담센터 운영 등 코로나 블루 극복 및 임직원 마음 건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美 전문매체 “LG 통돌이 세탁기 신뢰도 최고”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가 LG전자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세탁기 브랜드’로 선정했다.

6일 블룸버그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돌이 세탁기 브랜드’로 LG전자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로 LG전자는 4년 연속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세탁기 브랜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컨슈머리포트는 LG전자 통돌이 세탁기에 대해 △5년 내 고장 날 가능성을 나타내는 예측 신뢰성 항목에서 ‘탁월’ 등급 △소비자 만족도 항목에서 ‘매

우 우수’ 등급을 각각 부여했다. 두 가지 항목에서 각각 탁월과 매우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곳은 LG전자가 유일하다.

통돌이 세탁기에 이어 드럼 세탁기 부문도 신뢰성과 소비자 만족도에서 각각 최고 점수인 ‘매우 우수’와 ‘탁월’ 등급을 받았다.

특히 LG 드럼세탁기(모델명 LG WM3500CW)는 40여 가지 제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LG전자는 컨슈머리포트가 선정한 ‘2021년 최고의 세탁기’에서 드럼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모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LG 새 효자사업 '반도체 기판'

반도체 대란에 기판도 '귀한뎀'
부품 계열사 고부가 제품 강화
삼성전기, 1분기 매출 4422억
LG이노텍, 영업익 비중 2배 ↑

글로벌 반도체 공급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반도체 인쇄회로기판(PCB)까지 부족 현상이 번졌다.

공급 대비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LG 부품사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호황을 맞았다. 이에 두 업체는 고부가 제품을 위주로 사업 영역을 정비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6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표적인 반도체 기판 제품인 △FC-BGA(Flip Chip-Ball Grid Array)와 △FC-CSP(Flip Chip-Chip Scale Package) 두 부품에 대한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지속했던 PC와 TV 산

업 호조가 올해까지 유지되면서 반도체 필요분이 늘어났다. 실제로 올해 1분기 PC 시장은 10년 만에 최대 호황을 기록했고, TV 제조사들도 줄줄이 호실적을 내놨다.

반면 고객사들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사양은 점차 높아지면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했다.

미세한 회로를 여러 겹 쌓아 올리면서도 기판 면적은 더 넓은 FC-BGA에 대한 수요세가 강한데, 이는 고난도의 기술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세계 3대 반도체 기판 공급업체로 꼽히는 대만 유니마이크론의 PCB 공장에 지난해와 올해 초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다. 유니마이크론에선 모바일용으로 활용되는 FC-CSP를 주로 생산한다.

이러한 상황은 삼성전기 1분기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삼성전기 기판사업부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422억 원, 263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77억 원)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업부 내 반도체 패키지 기판 매출 비

중도 지난해 78%에서 81%까지 늘었다.

업계에선 201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삼성전기의 기판사업 구조조정 과정이 업황과 잘 맞물렸다고 분석한다. 2019년 지난해 PLP(패널레벨패키지) 사업을 삼성전자에 양도하고, 적자 폭이 컸던 스마트폰 메인기판(HDI) 주 생산라인인 중국 쿤산(崑山)법인을 정리했다.

현재 남은 사업은 경연성인쇄회로기판(RFPCB)과 반도체 패키지 기판 두 가지다. 전자업계에선 올해 RFPCB 사업도 정리해 고부가가치 제품인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 주도권 잡기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삼성전기의 FC-BGA 생산 능력(CAPA)은 일본 이비덴, 신코 등에 이어 5~6위권이다.

LG이노텍의 경우 기판소재 사업부를 통해 FC-CSP를 세계 상위 AP업체한테 공급한다. 매출 비중은 6%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비율은 두 배를 넘는 13%다. 올해 들어선 조금 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FC-BGA 제품 개발을 위한 전담팀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우리 기자 we1228@

7월부터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

**국내선 편도당 3300원 부과
항공사, 수익성 악화 '비상'**

항공업계가 다음 달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국내선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항공사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당 3300원 부과할 예정이다. 이달 2200원에서 인상되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가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공유의 깔런당 평균값이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에 따라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으로 지난해 5월부터는 0단계가 적용돼 부과되지 않다가 올해 2~3월에는 1단계가 적용돼 편도당 1100원이 부과됐다. 4월부터는 2단계가 적용, 2200원을 부

과해왔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통합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73.9달러로 1년 전보다 108.9%, 전월 대비 3.3%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에 국제유가는 올해에만 40% 가까이 올랐다. 2일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68.83달러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가 상승은 항공사의 수익성에 부담이다. 진에어 1분기 IR 자료에 따르면 항공연료비는 영업비용의 13%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국내 노선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제선 회복 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LCC들은 국내선 특가 할인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이 1만 원대인 경우는 물론이고 무제한 탑승권, 정기권 등도 내놓고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Tel. 1661-9316 | dieuamour.co.kr

DIEUAMOUR
No. 3101 Bellezza Line



현대글로벌비스 자동차운반선(PCTC)이 항해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글로벌비스

현대글로벌비스, 자동차 운반선 활용해 전기차 특화 운송·벌크 선적 '두토끼'

국내 최대 종합물류기업 현대글로벌비스가 자동차 운반선(PCTC) 사업에서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특화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PCTC로 대형 중량화물(브레이크 벌크)을 운송하는 등 화주 편의 극대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최근 전기차 맞춤형 해상운송 솔루션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완성차 시장에 맞춰 이를 운송하는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전기차에 특화된 선적·하역 매뉴얼을 수립하고 작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배터리 셀이 차량 하부에 넓게 장착돼 있어 내연기관차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차량의 간략한 정보를 포함해 배터리 충전율과 화주의 요구사항 등을 내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공유한다. 또 주기적으로 배터리 충전 상태와 소모량, 외관 등의 정보를 화주사에 공유한다. 이를 통해 화주사는 선적 전에 필요한 배터리 충전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해당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한국선급(KR)과 '전기차 해상 운송 안전 취급 가이드 공동연구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기차 특화 해상운송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글로벌비스는 브레이크벌크를 PCTC로 운송하며 해운사업 매출의 다각화를 일궈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의뢰를 받아 화력·풍력 발전설비를 미국 볼티모어, 독일 브레머하펜 등지로 해상 운송했다. 브레이크 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와 같은 용기에 적재되지 않고 선적되는 화물로, 산업·발전설비, 전동차, 철강제품, 건설·광산 장비 등을 말한다.

PCTC는 다른 선박에 비해 화물의 운송 안정성이 뛰어나다. 수평형 방식으로 화물을 선적할 수 있어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의 수직형 하역보다 화물이 받을 충격과 낙하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다. 이 때문에 현대글로벌비스의 PCTC 운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선복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브레이크벌크 화주에게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다.

이렇듯 현대글로벌비스의 유연한 PCTC 선대 운영은 비계열 매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완성차 운송의 독보적인 역량에 다양한 연계사업까지 갖추게 된 현대글로벌비스는 PCTC 사업 비계열 매출 비중을 올해 55%로 끌어올렸다. 해운 사업에 본격 진출한 2010년(12%)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고 수치다.

이렇듯 현대글로벌비스의 유연한 PCTC 선대 운영은 비계열 매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완성차 운송의 독보적인 역량에 다양한 연계사업까지 갖추게 된 현대글로벌비스는 PCTC 사업 비계열 매출 비중을 올해 55%로 끌어올렸다. 해운 사업에 본격 진출한 2010년(12%)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고 수치다.

유창욱 기자 woogi@

“젊은 피 수혈, 위기 탈출” 대교 ‘2세 경영’ 가속

‘강영중 회장 장남’ 강호준 상무, 신임 대표이사 선임
작년 280억 첫 적자 올해도 부진 ‘분위기 반전’ 나서
에듀테크 사업 확장 집중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 수렁에 빠진 대교가 ‘젊은 피’ 수혈을 통해 실적 정상화를 꾀한다. 대교의 구원투수로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의 장남인 강호준 최고전략 책임 상무가 발탁돼 사내에서는 기대감도 남다르다. 대교그룹 전체로 보면 대교그룹 오너 2세로의 경영 승계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적자가 지속하는 등 실적 회복이 더딜 경우 경영 수완에 대한 재평가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영업 적자를 냈다. 대교는 지난해 연결기준 2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영업이익이 294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상

당하다. 게다가 매출은 6270억 원으로 2000년 7334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이래 20년 만에 7000억 원을 밑돌았다.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 외에도 ‘에듀테크’가 교육업계의 경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뒤처진 결과로 평가된다. 에듀테크는 오프라인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온라인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에듀테크 회원 수로 입증되는데, 대교의 에듀테크 교육프로그램 가입 학생 수는 작년 하반기 기준 20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17만 명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경쟁사인 웅진씽크빅의 46만 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강호준 대교 대표이사



이를 반영하듯 대교의 어닝 쇼크는 올해에도 이어졌다. 소규모의 적자나 본전 수준의 실적이 예상됐으나 1분기 영업손실은 4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었다. 그나마 전 분기인 작년 4분기 61억 원에서 적자 규모가 줄었다는 점이 위안거리였다.

최근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대교는 선수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7년간 대교를 이끌었던 박수완 대표는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았음에도 지난 3월 중순 실적 부진을 책임지고 물러났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이 강호준 신임 대표다. 강 대표는 2009년 대교 해외사업전략실에 입사해

2013년 해외사업총괄, 2018년 최고전략 책임자를 맡아 그룹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강 대표는 대교의 에듀테크 사업에 힘을 주고 있으며 사내에서는 강 대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대교 관계자는 “아무래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젊은 CEO로 변경되다 보니 내부적으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며 “또 대교는 2019년 수학 과목을 시작으로 올해는 국어나 영어 쪽으로 에듀테크(씨릿)를 확장하는 등 이에 비중을 높여 실적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교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흑자를 내는 등 점진적인 실적 회복을 예상한다. 증권업계 컨센서스에 따르면 대교는 2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2분기 영업손실은 17억 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3분기 19억 원, 4분기 54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가 예상된다.

조남호 기자 spdran@

“모바일 신작 ‘제2의 나라’로 글로벌 평정”

인터뷰

박범진 넷마블네오 PD

10일 韓·日 등 5개국 동시출시
‘리니지2 레볼루션’ 핵심 개발진
3년간 개발 ‘AI모드’ 등 세 시도



“제2의 나라로 전 세계 다중접속임무 수행게임(MMORPG)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넷마블의 올해 최대 기대작으로 꼽고 있는 ‘제2의 나라’ 출시가 임박했다.

이 게임은 레벨라이브와 스튜디오 지브리가 협업한 판타지 RPG ‘니노쿠니’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두 개의 세계를 오가는 환상적인 스토리와 지브리 철학이 담긴 세계관이 한 편의 극장편 애니메이션처럼 펼쳐진다. 세계적 거장 ‘히사시 조’ 음악이 더해져 이용자는 명작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넷마블이 2019년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를 출시하며 애니메이션 풍의 게임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제2의 나라를 통해 세계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목표다.

제2의 나라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박범진(사진) 넷마블네오 PD는 “제2의 나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내세운 슬로건은 ‘Beyond Revolution’이다”라며 “국내에서 MMORPG를 좀 더 대중

화시키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국내외의 5개 지역에 출시를 앞둔 제2의 나라는 2016년 모바일 MMORPG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킨 ‘리니지2 레볼루션’의 핵심 개발진이 참여해 큰 기대를 얻고 있다. 약 3년 가량 개발 기간을 거쳐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5개 지역에 동시 출시될 예정이다.

제2의 나라에는 새로운 AI 기능이 도입된다. 서버의 로직이 캐릭터 AI를 제

어해 서버 내에서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실제로 플레이하지 않아도 캐릭터는 게임 내에서 계속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박 PD는 “제2의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른 이용자와 어울리고, 영향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AI 기능을 개발했다”며 “이용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제2의 나라 캐릭터는 그 세계에서 살아 움직인다”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2의 나라는 이용자 간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게임 재화의 거래가 아닌, 물건 자체의 교환이 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스페셜 킷, 코스튬, 이모티콘, 소셜액션 등 상위 콘텐츠의 보상이 제공되는 의미 있는 물품들이 중심이다. 특히 고부가가치의 아이템만 거래되면 유명무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설계도 준비했다.

박 PD는 “제2의 나라는 이용자들간의 소통과 자연스러운 놀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이용자들간의 경쟁을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콘텐츠를 차례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즐겼던 MMORPG들의 어떤 부분에서 재미를 느꼈었는지 되돌아보고 그때의 즐거움을 제2의 나라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했다”며 “가능한 많은 분께서 제2의 나라를 경험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LG U+, 양자보안으로 암호 막는다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사업’ 참여... 공연 예매 등 활용

LG유플러스가 양자보안체계를 업그레이드해 공연·엔터테인먼트 분야 응용서비스에 양자보안을 확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1년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에 △코워버(10G급 전송장비) △서울대학교 크립토크랩(PQC알고리즘) △ICTK(PUF) △드림시큐리티(인증·암호화 모듈) 등 파트너들과 함께 참여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산업·의료분야 전용회선에서 검증한 양자내성암호를 공연·엔터 분야 응용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한다. 양자내성암호를 활용한 엔드 투 엔드 암호키교환 방식은 전송 거리에 제약이 없고, 향후 해저케이블 구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양자키교환(QKD)과는 달리 이미 구축한 전송망에 선로를 추가로 구성하거나 중계 노드를 만들 필요 없이 양단(兩端) 구성만으로 보안을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USB에 넣었던 양자난수기반 물리복제방지칩(PUF)을 유심(USIM)과 IC 카드에 탑재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공연티켓 예매·구매자 인증 강화 △안면인식 활용 산업체 출입 보안 등 응용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PUF-USIM은 복제할 수 없는 물리적 고유키를 이용해 인증서를 내장하는 PUF 칩이 USIM 안에 들어간 보안이 강화된 유심이다. 소형 디바이스, IoT 기기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티켓예매 서비스를 예로 들면, 스마트폰으로 고객이 공연 티켓을 예매하면 예매정보 양자내성암호가 적용된 전용회선을 거쳐 LG유플러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통해 구매정보 서버로 전달된다. 공연 전 고객이 티켓을 발권할 때는 양자보안이 적용된 PUF-USIM 인증기술로 티켓 구매자임을 인증하게 된다. 암호 거래 방식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중진공, 수출bauer처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수출bauer처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8일까지다.

수출bauer처는 중소기업이 규모와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2차 모집에는 33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900여 개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고,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

bauer처와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바이오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혁신bauer처로 구분해 모집한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전년도 수출 규모 등에 따라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수출bauer처를 지급한다. 기업은bauer처를 활용해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대원 기자 leedw@

KISA ‘암호모듈검증’ 인력양성 전문교육

28일부터 5일간 온라인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암호모듈 검증 암호 전문인력 양성 및 암호산업 육성을 위한 ‘2021 암호모듈검증 전문교육’을 기초·심화과정으로 나눠 연 2회 실시하며, 이번 상반기 기초교육을 이달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암호모듈검증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관 및 유통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KISA는 지난해 처음으로 기초 암호이론 및 암호모듈 검증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암호모듈검증 기초교육을 시행했다.

작년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70.2%가 ‘암호모듈 개발 시 본인의 직무 활용에 도움이 된다’, 74%가 ‘교육 전 대비 교육 후 이해도 및 지식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올해 두 번째 운영하는 ‘암호모듈검증

전문교육’은 전년도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초과정 외에도 심화과정을 별도 편성했다.

먼저 상반기 ‘기초교육’ 과정은 △기초 암호 수학 △대칭키, 공개키 등 암호 알고리즘 △암호모듈검증 제도 및 시험 방법론 △암호모듈검증 시험 및 검증기준 등으로 구성되며, 하반기 ‘심화교육’은 암호모듈 구현에 초점을 맞춰 구현 시 주의사항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초교육 과정은 암호 이론 및 암호모듈검증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오는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최대 +50% 더 나가는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

BIG BANG

문의) 1544-8070

〈과시욕〉 MZ세대 ‘플렉스’가 키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명품 10개 중 1개 온라인 거래
구매자 87% 10~30대 차지

업계 1위 머스트잇 年 80% 성장
트렌비 월 거래액 150억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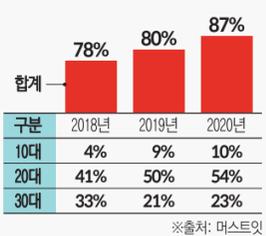
MZ세대가 명품 업계 큰 손으로 부상하면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커머스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젊은층들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욕구를 분출시키는 보복 소비에 나서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이투데이가 시장조사전문업체 유로모니터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국내 온라인(이커머스) 명품 시장 규모는 1조59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조4370억 원)보다 11% 증가한 수치로 5년 전인 2015년(1조455억 원)과 비교하면 52% 가량 시장 규모가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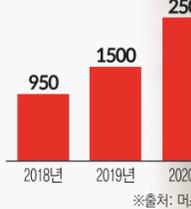
전체 명품 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2015년 8.6% 수준이던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2017년 9.3%로 9%대 벽을 깬 뒤, 지난해에는 10.6%로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명품 10개 중 1개가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팔린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온라인 명품 이커머스의 성장세도 매섭다. 국내 명품 플랫폼업계 1위 기업인 머스트잇은 매년 연평균 80% 이상 덩치를 불리고 있다. 2018년 950억 원이던 이 업체의 거래액은 이듬해 1500억 원으로 늘었거, 코로나19 덕을 봤던 지난해는 2500억 원으로 치솟았다.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업체는 올해 3월에는 월 기준 역대 최대 거래액인 290억 원을 돌파했다.

머스트잇 MZ세대 거래액 비중



머스트잇 거래액 추이 (단위: 억 원)



업계에서 매기는 몸값도 높아졌다. 지난해 7월 1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월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이 업체는 불과 9개월 만에 지난해 말 카카오투네스트먼트와 케이투인베스트먼트 트파트너스로부터 130억원 규모의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때 인정받은 기업가치는 2300억 원으로 누적 투자금은 280억 원에 이른다.

머스트잇을 먹여 살리는 이들은 MZ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머스트잇 거래액에서 10대와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8%를 기록했는데, 이듬해 80%로 뛰었다. 작년에는 87%로 더 높아졌다.

또 다른 명품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 트렌비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IMM인베스트먼트와 뮤렉스파트너스, 한국투자파트너스에 이어 신규 투자자 에이티엠 인베스트먼트가 참여가 참여한 220억 원의 C라운드 투자를 끝냈다. 2019년 시리즈A 투자를 시작으로 3년 만에 누적 투자액은 400억 원이다.

2017년 2월 처음으로 사업에 나선 트렌비는 약 4년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Monthly Active Users)가 450만 명, 월 거래액 150억 원을 달성하며 기

세를 올리고 있다. 트렌비는 자체 개발한 검색엔진 ‘트렌봇’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최저가를 찾아주고, 단 한번의 결제로 세계 각지에 있는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특히 해외 6개의 글로벌 쇼핑 거점에 자회사를 설립해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한국, 영국, 미국에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 중으로 지난해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6번째 해외지사를 설립했다. 해외지사들은 파트너십 확장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가품 검수 역할을 담당하며 고객들이 합리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트렌비는 올해 연간 거래액 2.5배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체 개발한 검색엔진 ‘트렌봇’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중고 명품 거래 전 과정을 대행해 주는 리세일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해외 거점을 통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MZ세대가 적극 명품 구매에 나서면서 패션의류나 신발, 액세서리 등 중고가 럭셔리 제품은 이제 온라인 세상이라고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편의점 전국 권역별 인기 상품은? 서울은 · 강원도는 1위

전국 권역별 편의점 인기 상품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적 특성이 소비 품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이투데이가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의뢰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역별 주요 품목 매출을 추출, 전국을 5개 권역(△서울·경기 △강원 △충청·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으로 나누고 지수화한 결과 서울은 도시락이, 정육은 강원도 매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평균을 ‘1’로 하고 권역별로 매장당 평균 매출을 비교 분석했다. 권역별로 1보다 높은 수치는 평균보다 많이 팔렸다는 뜻이다. 1이하는 평균보다 적게 팔린 것을 의미한다.

도시락의 경우 서울·경기의 매출 지수가 1.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밀집한 수도권 내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체하는 직장인들이 큰 폭 늘어난 결과다. 이에 더해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는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 또한 영향을 끼쳤다는 게 GS리테일 설명이다.

반면, 간식류인 주먹밥(삼각김밥)의 경우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잘 팔렸다. 충청·전라 지역이 1.13, 대구·경북 지역이 1.07로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신선채소와 정육 상품 분류의 경우 강원도가 1.51, 1.65의 압도적인 매출 지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대표적 관광지인 강원도의 특수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김치, 조미료 상품 분류 또한 가장 높은 매출 지수인 1.74, 1.29를 기록했다.

주류의 경우 지역별로 인기 품목에 차이가 있었다. 와인과 맥주의 경우 서울·경기가 각각 1.69, 1.24로 가장 높았다.



서울·경기 와인, 맥주 선호 충청·전라 막걸리 주로 마셔 얼음컵은 대구·경북 잘팔려

반면 전통주, 막걸리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인 충청·전라, 대구·경북 등이 각각 1.1과 1.07로 평균 이상의 매출 지수를 기록했다. 지역 전통주와 막걸리 등이 활발하게 소비하는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얼음컵의 경우 ‘대프리카’로 불리는 폭염의 도시 대구·경북과 충청·전라 지역이 1.11의 동일한 매출 지수를 기록하며 공동 1위에 올랐다.

이외에 의약, 의료품의 경우는 충청·전라, 대구·경북이 각각 1.12, 1.06로 서울·경기에 비해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심야시간대 안전장비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고객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S25 관계자는 “주요 품목 매출을 분석한 결과 권역별로 각기 다른 강세 품목이 확인됐다”며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세 품목의 상품 종류를 확대하고 특별 행사를 기획하는 등 차별화 고객 혜택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롯데백, 파 니엔테 와인 ‘니켈&니켈’ 4종 선보여

롯데백화점이 미국 와이너리 ‘파 니엔테’의 싱글 빈야드 와인 ‘니켈&니켈’ 4종을 국내에 출시한다. 니켈&니켈은 나파밸리와 소노마밸리 지역에서 ‘하나의 포도밭에서 만든 하나의 와인’이란 콘셉트로 때루이의 개성이 뚜렷하게 반영된 싱글 빈야드 와인이다. 카네로스 지역의 ‘트루차드 사도네이’, 오크빌의 ‘브랜딩 아이언 카베르네 소비뇽’, 세인트 헬레나의 ‘도그레그 카베르네 소비뇽’, 나파밸리의 ‘수스콜 랜치 멀롯’ 4종으로, 각 200병 한정 롯데백화점 10개 와인매장에서만 단독 판매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유람선 탄 듯... 아라뱃길 보며 브런치 먹어볼까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레스토랑 ‘에이치654’ 오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이 한강 아라뱃길이 보이는 위치에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을 연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7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서관 1층에 파인 다이닝(Fine dining, 고급) 레스토랑 ‘h’ 654(에이치654)를 오픈한다고 6일 밝혔다. 78석 규모로 매장 면적은 주방을 포함해 250㎡(약 76평)다.

이번에 문을 여는 h’ 654는 한강 아라뱃길과 맞닿아 있는 벽이 전면 유리창으로, 한강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강 아라뱃길에 위치해 국내 프리미엄아울렛 중 유일하게 한강 뷰를 볼 수 있는 김포점의 위치적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매장에서는 브런치·파스타·스테이크·피자 등을 30여 개 메뉴를 선보인다. 이탈리아 햄인 프로슈토와 프랑스 전통 요리 갈레트, 수프 등으로 구성된 ‘프로슈토 갈레트 플레이트(2만2000원)’과 부드러운 우유 식빵으로 만든 토스트 위에 계절과일, 크림치즈를 곁들인 ‘프렌치 토스트(2만

원)’, 그리고 오픈형 주방에 위치한 화덕에서 바로 굽는 ‘돼지불고기 피자(2만3000원)’ 등이 대표 메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미식가의 유람선”을 콘셉트로 한 레스토랑 ‘h’ 654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포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잠시나마 힐링되는 시간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4월부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을 ‘크루즈가 정박하는 지중해 휴양지’ 콘셉트로 꾸미고 있다. 느티나무·청단풍나무 등이 심겨진 1.2~1.6m 높이의 대형 화분 30여 개로 둘러싸인 1000㎡ 규모의 야외 조경 공간 ‘빅팻 가든’을 선보였으며, 닛 모양을 형상화해 개발한 김포점만의 엠블럼을 곳곳에 배치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식후에 드세요”

항생제와 함께 먹지 말아야

장 건강을 위해 찾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식후에 섭취하고, 장 질환이 있거나 약물 복용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바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선택을 위해 기능성 및 종류, 섭취 대상, 섭취 방법,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전 연령층이 모두 섭취할 수 있으며, 특히 식이습관이나 환경적 요인 등으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져 장 건강 등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장 건강에 대한 기능성 원료로 고시된 균주는 락토바실러스 등 총 19종이다. 장 건강 이외에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에는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코 상태 개선에 도움,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 질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 체지방 감소에 도움 등이다.

식약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생존해 도달하기 위해 위산이 중화된 식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다만, 위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조된 장용성 제품 등은 식전, 식후 모두 섭취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일일 섭취량이 1억~100억 CFU로 정해져 있으므로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임산부·노약자 등 취약집단에 속하거나, 특이체질이거나 장 질환이 있는 경우, 항생제 등 약물 복용 시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항생제와 함께 섭취하면 유익균이 사멸될 수 있기 때문에 병용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항생제 복용 이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식중독 등 장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혜은 기자 euna@

한국 대표 ETF 수익률 '세계 최대' SPY도 제쳤다

삼성자산운용 KODEX200 수익률 124.7%... SPY 88.53%
코로나19 이후 코스피200 성장폭 S&P500보다 커 실적 호재

한국 대표 상장지수펀드(인덱스펀드·ETF)가 미국 최대 ETF보다 단기와 장기 수익률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투자하는 주식 열풍과 함께 해외 ETF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실속 면에선 국내 ETF가 한 수위였던 셈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삼성자산운용의 ETF 'KODEX200'의 수익률(배당 제외)이 지난해 3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 저점을 기록했던 때부터 현재까지 미국 대표 ETF인

'SPDR S&P 500 ETF Trust(SPY)'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KODEX200의 수익률은 124.7%(4일 중가 기준)였고, SPY의 수익률은 88.53%였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대표하는 두 ETF는 주식 투자가 생소한 이들을 위해 다수의 우량 종목을 묶어서 운용하는 게 특징이다. KODEX200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우량 종목 200개를 지수화한 코스피200을 추종한다. 지수가 오르면 KODEX200의 가격도 오르고, 지수가 내리면 가격도 같

이 내려간다. 코스피200의 종목은 시장 대표성과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하며, 전체 종목을 9개업 군으로 분류해 시가총액과 거래량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우선 선정한다.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편입과 편출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가 이뤄져, 시장에서 가장 우량한 종목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를 '패시브 펀드'라 부르기도 한다. SPY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편입 종목 500개에 시총 상위종목 위주로 가중치를 두고 분산투자한 ETF다. 두 ETF의 등락은 각 시장의 대표 종목들의 성장과 비례하는 셈이다. KODEX200의 성장률이 SPY보다 높았던 것은 코로

나19 전 세계 유행 이후 코스피200이 S&P500보다 상대적으로 더 성장했기 때문이다. 사실 ETF는 연간 수익률이 5~10% 사이로 1년 단기 투자보다 20~40년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다. 증시가 수년간 박스권에 갇히더라도 20년간 횡보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20년간 장기를 기준으로 KODEX200이 2002년 시가 5553원과 비교해선 678%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SPY는 264.34%(114.94달러→418.77달러) 수익률을 기록했다. 두 증시의 강세장 순환기 차이를 고려해도 국내 대표 ETF가 미국 대표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겼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이 많이 탄생하고 있어 우량 종목들의 성장성이 더 높을 것이라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의 성장성이 높았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글로벌 최고 기업 소유한다는 만족도와 안정성은 분명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등 국내 기업들도 신성장(이머징마켓)으로서의 투자 매력을 증명했다. KODEX200은 국내 최대 ETF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2000억 원 내외 수준이다. 같은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200(TIGER 200)은 일 평균 400억 원 내외의 거래대금을 기록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중소형 증권사, 대형사보다 쏠쏠하네”

신영증권, 순익 864.6% 상승
배당 2500→4000원으로 증가
한양증권, 순익 2배 가량 늘며
'차등배당'으로 주주가치 제고

하면 무려 864.6%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당 2500원 수준이던 배당이 4000원으로 늘어났다. 시가배당률은 6.8%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역시 지난해 순이익이 1260억 원으로 전년보다 144.6% 늘어난 실적을 기록했음은 물론, 올 1분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314.7% 증가한 488억 원을 기록하는 등 높은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을 들고 있던 투자자는 올해 시가배당률 7.8% 수준의 배당을 쏠쏠하게 챙겼다. 예를 들어 이베스트투자증권 1000주를 들고 있는 주주는 이번엔 55만 원의 배당금이 계좌에 입금됐다. '가파른 성장세'에 한양증권도 빠질 수 없다. 한양증권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보다 107.3% 증가했고, 올 1분기는 전년 동기과 비교해 169.3% 늘었다. 올 1분기 순이익은 2019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능가했다. 이에 따라 한양증권은 올해 주주들에게

보통주 기준 주당 750원의 배당을 하기로 했다. 시가배당률은 7.9%다. 특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배당보다 더 높은 '차등배당'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국증권도 '조용한 강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지난해 순이익은 606억 원으로 전년보다 121.0% 실적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주당 1200원의 배당을 결정했고, 시가배당률은 5.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가 상승률도 가파르다. 신영증권의 주가는 1년 전보다 40.8% 증가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무려 56.7% 상승했고, 한양증권 주가 수익률은 105.8%다. 주가 상승률만 보면 '동학개미'의 수혜를 입고 업계 입지가 높아진 키움증권(37.1%)보다 높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의 보통주 시가배당률이 2.1% 수준"이라면서 "주가수익률이나 배당수익률을 보면 증권주 투자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사들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영지 기자 e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중소형 증권사는 견고한 실적을 냈다. 이에 중소형 증권사에 투자한 주주들도 올해 두툼한 배당을 받았다. 배당과 주가 수익률을 보면 대형 증권사 주주보다 더 큰 수익을 안았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다투(Dart)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지난 2일 보통주 1주당 4000원의 배당을 공시했다. 3월 결산법인인 신영증권은 지난 한 해 동안 높은 실적을 기반으로 지난해보다 40%가량 증가한 배당을 약속한 것이다. 신영증권은 2020년 3월~2021년 3월까지 한 해 동안 연결기준 1961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도와 비교

사명변경 공시 기업 중 거래정지 기업

변경 전 사명	변경 후 사명	사명변경 이유
블러썸엔씨	휴온스블러썸	회사의 경영 목적 및 전략에 따라 적합한 상호명으로 변경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애머릿지코퍼레이션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상호
지외이커머스	자유온	신규사업 및 이미지 제고
포비스티앤씨	인피니티엔티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상호 변경
포스링크	씨엔티85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명
더블유에프엠	골드앤에스	기업이미지 쇄신
네스엠	씨오더블유엔	기업이미지 제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변경
한류타임즈	스포츠서울	미디어사업 확대 및 강화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명변경 상장사 6곳 중 1곳 '거래정지'

이미지 제고 '꼼수'... 투자 주의보
올해 사명을 바꾼 전체 상장사 중 6곳 중 1곳은 거래정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명을 자주 바꿀수록 이미지 제고를 내세운 '꼼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이투데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사명변경을 공시한 기업은 총 48개사로 나타났다. 아직 주주총회에서 사명변경이 승인되지 않은 5개 기업을 제외하면 총 43개사가 사명변경을 완료했다. 상장사 사명변경의 이유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다각화'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신규사업 추진, 기업이미지 쇄

신 등 비슷한 이유가 뒤를 이었다. 상장사들의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 변경 안건을 가결할 경우 변경 횟수, 이유 제시 등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이에 사명변경이 기업 이미지 탈바꿈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내부 문제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이 이미지 쇄신용으로 사명부터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블러썸엔씨는 휴온스블러썸으로 사명을 바꿀 예정이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애머릿지코퍼레이션으로 새옷을 입었다. 이어 자유온(전 지외이커머스), 인피니티엔티(전 포비스티앤씨), 씨엔티85(전 포스링크), 골드앤에스(전 더블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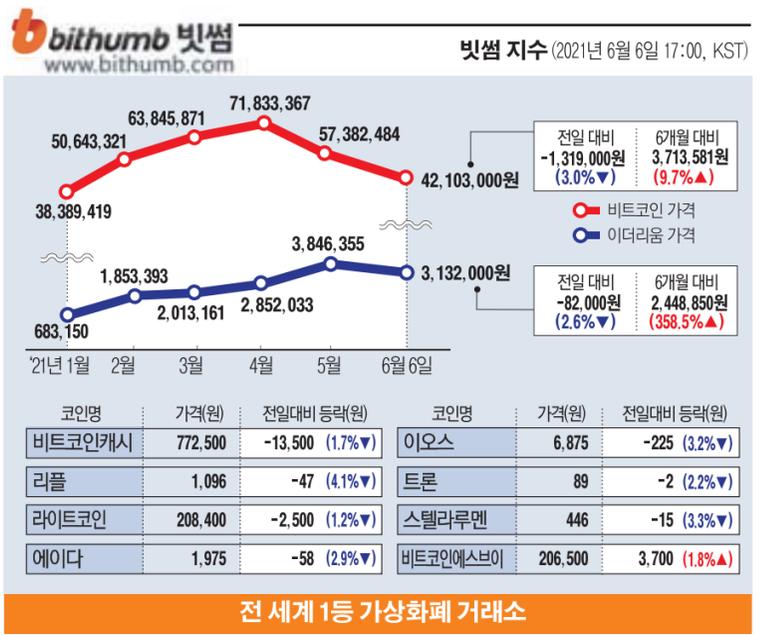
프엠), COWON(전 네스엠), 스포츠서울(전 한류타임즈) 등도 거래정지 상태에서 사명변경을 통해 이미지 제고를 시도했다. 하지만 수차례 사명을 바꾼 기업일수록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거래정지된 스포츠서울의 경우, 스포츠서울이십일→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스포츠서울→한류타임즈에서 다시 스포츠서울로 이름을 바꿨다. 이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 중인 COWON은 신스타임즈→네스엠을 거쳐 현재 사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골드앤에스 역시 에이원엔→더블유에프엠에서 사명을 바꿨다. 자유온은 처음엔씨→지외이커머스로 탈바꿈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닥 상장사가 사명을 바꾸려는 이유를 살펴보고, 회사에 어떤 약재가 발생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세은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사명 변경은 기업 M&A, 기업 정체성 쇄신 등으로 나올 수 있는데 기업 이미지 쇄신이라면 회사의 재무적 어려움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들은 기업이 상호변경을 할 때 먼저 이유를 살펴보고, 왜 사명을 변경했는지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아 기자 ljh@

美 소비자물가지수에 관심 집중

주간 증시 전망

증권사 연구원들은 이번주 코스피 지수가 긍정적인 수출 지표와 백신 접종 확대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의 예상 코스피 범위는 3180~3300선이다. 다만 오는 10일 미국에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잠재적인 변동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韓, 주력 품목 중심 수출 확대=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대외 수요 확대에 발맞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수출규모는 507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6%(16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규모는 11개월 연속 증가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자동차 역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신차와 전기차 수출 호조를 기록했다.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어 내수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누적 1차 접종자는 759만507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8%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이번 주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달 28일부터 지

난 3일까지 닷새 연속 상승하며 3247.53(증가)까지 올랐다. 지난달 10일 기록한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3249.30)와 불과 1.77포인트 차이이다. ◇6월 핵심 '美 5월 소비자물가지수'=미국의 물가지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월 시장의 흐름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투자는 미국의 '5월 CPI'와 '근원 CPI'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6%, +2.3%로 지난달 대비 소폭 둔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CPI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시장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만큼 테이퍼링 조기 언급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는 지난 4월 CPI 발표 당일 -2% 이상 하락했다. CPI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번주 증시 조정 강도는 지난달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지난 3일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메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4월 초부터 5월 말 사이 완만하게 성장했다. 이 가운데 연준은 회사채 매각을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일 "연준이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 펀드(SMCCF)"를 통해 사들인 회사채와 ETF를 올해 말 까지 점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도심 복합사업, 주민동의 순항 '근거법 통과'가 관건

쌍문역 동측·증산4구역 등 4곳
동의를 3분의 2 넘어 기준 충족

2·4 후속법안 빨라야 29일 통과
여야 '신규주택 현금청산' 입장차
추가 후보지 발표 등 지연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도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중 4곳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를 기준(3분의 2)을 확보했다. 다른 후보지도 주민 동의의 접근에 속도를 내고 있어 기준 주민 동의를 넘기는 후보지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이달 29일이나 열릴 예정이어서 추가 후보지 지정 등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중 사업 지구지정 기준인 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곳은 총 4곳이다. 도봉구 쌍문역 동측 구역은 지난 3일 기준으로 주민동의를 70%를 확보했다.

쌍문역 인근 D공인중개 관계자는 "쌍문역 동측은 10년 전에 개발을 추진했다가 한 번 무산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개발 열의가 높은 곳"이라며 "전체 공급 규모는 447가구로 다른 지역보다 작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지상 30층 규모로 짓는다면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정부 2·4 공급 대책의 핵심 공급 방안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LH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후보지 내 소유주

지역	위치	사업유형	공급가구수(개)	주민 동의율
도봉구	쌍문역 동측	역세권	447	70% 이상
	쌍문역 서측	역세권	1151	50% 이상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저층주거	1008	10% 이상
은평구	증산4구역	저층주거	4139	3분의 2(66.7%) 이상
	수색14구역	저층주거	944	3분의 2(66.7%) 이상
	불광근린공원 인근	저층주거	1651	3분의 2(66.7%) 이상
강북구	삼양역 북측	저층주거	588	20% 이상
영등포구	옛 신길 15구역	저층주거	2380	10% 이상

※ 출처: 국토부

의 10% 동의를 얻으면 예정지구로 선정되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도심 복합개발사업으로 약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에선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근린공원 인근 저층 주거지 등 3개 구역이 최근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3월 정부의 도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지정 후 두 달 만에 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다른 구역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도봉구 쌍문역 서측 구역은 주민동의를 50% 이상 확보했고 강북구 수유12구역은 소유주 20%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총 네 차례 발표한 도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46곳 가운데 예정지구 선정 기준인 주민동의를 10% 이상을 확보한 곳은 12곳이다. 국토부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동의를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주민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근거 법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는 수개월째 손을 놓고 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선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반드시 진

행되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은 2·4 대책 발표 직후인 2월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7월 예정지구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법안 통과가 안 돼 8월이나 그 이후로 연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달 29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만약 여야가 이달 중으로 2·4 대책 후속 법안 통과에 합의하면 이르면 29일 법안 통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2·4 대책 발표일 이후 후보지 내 신규 주택 매입분에 대한 현금청산 조항 등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합의를 장담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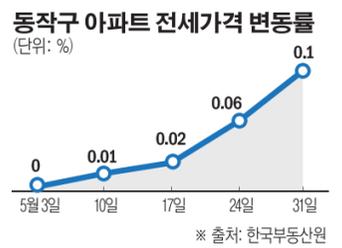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관계자는 "현금청산 조항과 관련해 입장 차가 워낙 커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다"며 "이제 막 본회의 일정이 정해져 상임위 일정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버리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월 중으로 2·4 대책 후속법안을 차질 없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두달 새 2억~3억 쯤" 전셋값 치솟는 동작구

4주 연속 상승세, 오름폭 확대
서초 재건축축대 이주 수요 영향
매물 품귀현상 전세시장 불안



"연초만 해도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가 7억 원에 전세 거래됐는데 불과 두 달 사이 가격이 2억~3억 원은 더 올랐어요. 이마저도 전세가 많지 않으니 금방 빠질 겁니다. 반전세·월세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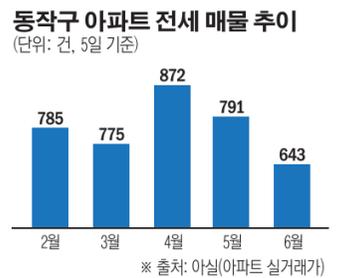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초구 재건축 이주 수요 움직임이 본격화한 영향이다. 여기에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되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서초구에서는 올 하반기 4000가구가 줄줄이 이주에 나선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2120가구)를 시작으로 신반포18차(182가구), 신반포21차(108가구), 반포주공1단지 3주(1490가구) 등이 이삿짐을 꾸릴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31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0.06% 올라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동작구는 지난달 들어 4주 연속(0%→0.01%→0.02%→0.06%→0.1%)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작구는 서초구 일대 재건축 이주로 전세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다. 기존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에 위치해서다. 주로 사당1·2·3동과 흑석동이 서초구반포·잠원동과 가까워 찾는 전세 수요가 많다. 이들 지역은 최근 몇 개월 전부터 밀려 드는 전세 수요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사례를 보면 사당2동 '신동아4차' 전용 60㎡형은 지난달 27일 7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이는 2~3개월 전과 비교하면 2억 원 가량 오른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 전세는 8억 원을 호가한다.

흑석동 '흑석 한강센트레빌2차' 전용 120㎡형은 2월 최고가인 9억 원에 전세 거래됐으나 지난달 5일에는 3억 원 오른 12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현재 호가는 14억5000만 원 선에 형성됐다.

흑석동 A공인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가 향후 세금 징수 목적으로 활용될까 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려 한다"면서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어린 자녀가 없어 학교 등 교육 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노년층 등은 동작구를 벗어난 먼 지역까지 전세를 알아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차 3법과 실거주 의무 강화 등 부동산 정책에서 재건축발 이주 수요 증가 영향으로 서울 강남 주변 지역은 물론 서울 전세로 전세난이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금주의 분양캘린더

6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8000여 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지난 주에 비해 두 배가량 물량이 늘었다. 지방에서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13개 단지에서 8032가구(일반분양 762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여의도 리미티오

148'과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경남 거제시 상동동 '더샵 거제 디클리브' 등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10개 단지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와 광주시 오폭읍 '오폭자이 디오브',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아리스타 프라이م'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정당계약을 받는 단지는 13곳이다. 서

울 중구 인현동2가 '세운 푸르지오 헤리티지'와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온정 우미린 더 퍼스트', 경남 양산시 상북면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양산' 등이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8개 단지는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단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도 11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준비에 나선다.

날짜	구분	시도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6/7 (월)	접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여의도리미티오148	
			경기	수원시 서둔동	힐스테이트수원데라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리스타프라이프 1순위	
			경남	양산시 덕계동	포레스트퀸101동 1순위	
					포레스트퀸102동 1순위	
	계약	서울	중구	인현동2가	세운푸르지오헤리티지 (~6/11)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온정우미린더퍼스트(민간임대) (~6/15)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에일린드 (~6/9)	
			광주	동구 신안동	무등산한옥마을리움더힐(1단지) (~6/9)	
			강원	동해시 동회동	동해프라임스위트 (~6/9)	
6/8 (화)	접수	경남	양산시 상북면	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 (~6/9)		
			충북	음성군 갑곡면	갑곡포그니 (~6/10)	
			경기	연천군 연천읍	e편한세상연천힐스하임 1순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1순위 (당해지역)
				충주	중산동	영종국제도시서한아파트 1순위
	발표	경남	양산시 덕계동	포레스트퀸101동 2순위		
				포레스트퀸102동 2순위		
			충남	서산시 석림동	e편한세상석림더노블 1순위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휴먼인더라운	
6/9 (수)	접수	경기	여주시 현안동	여주센텀빌더스그니처1단지		
			경기	연천군 연천읍	e편한세상연천힐스하임 2순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1순위 (기타지역)	
			충주	중산동	영종국제도시서한아파트 2순위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계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여의도리미티오148	
			경기	광주시 오폭읍	오폭자이디오브	
			수원시 서둔동	힐스테이트수원데라스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온정우미린더퍼스트(민간임대) (~6/15)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6/10 (목)	접수	경남	양산시 상북면	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 (~6/9)		
			충북	음성군 갑곡면	갑곡포그니 (~6/10)	
			경기	연천군 연천읍	e편한세상연천힐스하임 1순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1순위 (당해지역)	
			충주	중산동	영종국제도시서한아파트 1순위	
	발표	경남	양산시 덕계동	포레스트퀸101동 2순위		
				포레스트퀸102동 2순위		
			충남	서산시 석림동	e편한세상석림더노블 1순위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휴먼인더라운	
6/11 (금)	접수	경기	여주시 현안동	여주센텀빌더스그니처1단지		
			경기	연천군 연천읍	e편한세상연천힐스하임 2순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1순위 (기타지역)	
			충주	중산동	영종국제도시서한아파트 2순위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계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여의도리미티오148	
			경기	광주시 오폭읍	오폭자이디오브	
			수원시 서둔동	힐스테이트수원데라스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온정우미린더퍼스트(민간임대) (~6/15)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날짜	구분	시도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6/9 (수)	접수	대전	중구	신화동	대전해모르더센터라 1순위 (기타지역)
			경남	거제시 상동동	더샵거제디클리브 1순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 1순위 (당해지역)
			충남	서산시 석림동	e편한세상석림더노블 2순위
			경기	광주시 오폭읍	오폭자이디오브
	발표	경기	광주시 오폭읍	오폭자이디오브	
			수원시 서둔동	힐스테이트수원데라스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온정우미린더퍼스트(민간임대) (~6/15)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경기	연천군 연천읍	e편한세상연천힐스하임 1순위
6/10 (목)	접수	경남	양산시 상북면	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 (~6/9)	
			충북	음성군 갑곡면	갑곡포그니 (~6/10)
			경기	연천군 연천읍	e편한세상연천힐스하임 1순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1순위 (당해지역)
			충주	중산동	영종국제도시서한아파트 1순위
	발표	경남	양산시 덕계동	포레스트퀸101동 2순위	
				포레스트퀸102동 2순위	
			충남	서산시 석림동	e편한세상석림더노블 1순위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휴먼인더라운
6/11 (금)	접수	경기	여주시 현안동	여주센텀빌더스그니처1단지	
			경기	연천군 연천읍	e편한세상연천힐스하임 2순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1순위 (기타지역)
			충주	중산동	영종국제도시서한아파트 2순위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계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여의도리미티오148
			경기	광주시 오폭읍	오폭자이디오브
			수원시 서둔동	힐스테이트수원데라스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온정우미린더퍼스트(민간임대) (~6/15)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5년간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1조원 넘겨

수도권 4193건, 77% 차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77%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사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5453건이라고 밝혔다. 사고금액은 약 1조915억 원에 달했다.

2016년 27건 수준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2017년 33건, 2018년 372건으로 늘어난 뒤 2019년 1630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2408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6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

억5000만 원, 작년 4682억3000만 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는 5월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983건, 사고금액은 1889억6000만 원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수도권에서 4193건 발생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사고금액으로 보면 9144억 원으로 전체의 84%에 이르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의 급증세는 매해 보증금 반환 사고 지체가 많이 발생한 영향도 있지만 보증가입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로 집을 얻으면 전 재산을 쏟아붓고 부족한 돈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기에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재산을 잃는 것과 같다"며 "연간 수천건의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친정부 코드 인사 후폭풍’ 檢 안팎 부글부글

변협 “이성운 서울고검장 승진’ 정치적 중립 훼손” 성명 중간간부 인사까지 이어질 듯... 변필건·이정섭 거취 주목

검찰 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들이 법무부가 최근 실시한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 대해 발탁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한 인사”, “방탄 검찰”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의 탱크로 밀어붙인 난장판 인사”라며 “검찰 인사는 한마디로 개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인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은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장에 안착하면서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 등 주요 항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대한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 지검장이)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락시키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검장이 떠난 자리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채운다. 이 검찰국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불참한 인물이다.

김 전 차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이 사건의 지휘 라인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동했다. 신입 수원지검장에는 그동안 수원지검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리를 옮겨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반면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고시 폐지 후 법관 교육을 담당하는 사법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선 검찰청의 한 간부는 “문 정부 임기 말 주요 수사의 길목을 막으려는 노골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다른 검찰 간부도 “이 지검장을 영전시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교롭게도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

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특수통이 일부 기용되는 등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한 인사라는 우호적인 평가도 있다.

이번 고위 간부 인사의 후폭풍은 조만간 있을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급 인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상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시행한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인 1년 동안에는 전보 조치될 수 없다. 그러나 검찰 직제개편이 있는 경우 필수보직 기간과 관계없이 전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중간 간부 인사에서 주요 수사팀이 대부분 교체될 수 있는 만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김종용 기자 deep@



태극기 찾기 힘든 현충일

제66회 현충일인 6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게양된 조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회식 참석했다 사망한 공군 부사관 ‘과로사’”

부대 회식이 끝난 후 사망한 공군 부사관에 대해 공무원 질병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같은 날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후 A 씨에 대한 부검이 시행된 결과 사망원인은 관상동맥벽리증으로 확인됐다.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2019년 4월 A 씨의 공무와 사망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조기 출근과 야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종합해 보면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60시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1.48시간 근무했다”면서 “망인이 사망에 근접한 시기인 추석 연휴 내내 출근하고 진급 심사를 위해 휴무에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해 사망으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김오수-김진욱 내일 첫 회동 ‘이첩 갈등’ 해소되나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번 주 첫 만남을 가진다.

김 총장은 8일 김 처장과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갖는다. 후임 임명자가 찾아가는 선례에 따라 김 총장이 공수처를 직접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조건부 이첩’을 두고 줄곧 마찰을 빚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이첩해달라”는 단서를 달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자들을 직접 재판에 넘겼다.

최근에는 검찰 비위 사건의 이첩 기준을 두고도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공개한 대검 비공개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검사는

수사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진정 사건 등도 이송이나 이첩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했다. 해당 예규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김 총장은 일단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두 기관장의 만남이 공-검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자 간 회동과 함께 검찰 인사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추진해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합참단 등을 포함한 ‘5자 협의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회동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각 기관을 상대로 내사·수사 중인 사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용 기자 deep@

고두현의 산책자를 위한 인문 에세이

『냉면꾼은 늘 주방 앞에 앉는다』



우리 삶에 깃든 눈물과 해학, 연민과 사랑……
시인의 ‘생각 산책’ 길에 펼쳐진 이야기 잔칫상
재미있고 진솔하고 발효된 맛이 깊다!

“아, 모든 인간의 이야기에는 눈물과 해학이 있고, 연민과 사랑이 있고, 절망과 고통이 있구나. 이야기가 재미있고 진솔하고 발효된 맛이 깊어 열심히 먹다보면 내가 그 동안 성실하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살아야 내 삶 또한 진실한 인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문득 깨닫는다.”

- 정호승(시인)

냉면꾼은 늘 주방 앞에 앉는다 | 고두현 지음 | 14,800원 | 256쪽
문학의숲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영화빌딩 | 전화 02-325-5676 | 팩스 02-333-5980 | 전국 모든 서점에서 구매가능합니다.

광고심의필 : 2020-1540-000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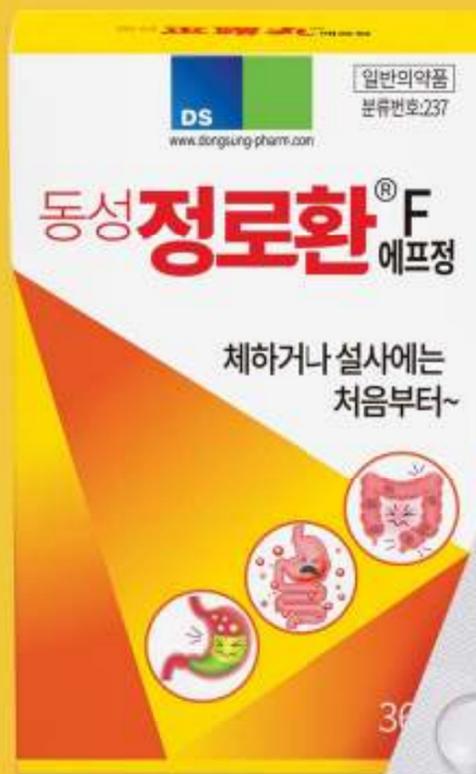


체함
배함
설사



넌 끝났어

뱃속에서 일어나는
전쟁같은 증상들을 제압한다~
동성제약 **정로환F**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소비자 상담전화 : 080-001-0921

“제조·수입기업, 제품안전 인증관리 필수 시대”

AI 시험인증 플랫폼, 김성제 시큐어넷 대표

기업 이미지 무너지는 건 한순간...국내외 인증관리 지원 고객사 700여곳, 이탈률 0%·매달 15%가량 신규 유치

국내 많은 제조·수입 기업들은 제품의 시험 인증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문서 관리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일각에선 어려움을 이유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판매하기도 한다. 유해물질 검출, 배터리 사고 등의 사회 이슈가 보통 이 같은 사례에서 파생된다.

김성제(사진) 시큐어넷 대표이사는 창업 배경을 두고 사회적 책임을 언급했다. 첫 시작은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김 대표는 대표적인 인증 서비스 기업인 SGS코리아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들의 제품 인증 관련 데이터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손쉬운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김 대표는 6일 서울 강남 본사에서 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기업이 인증 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한다”

며 “유해물질 검출, 배터리 사고 등과 같은 사건 사고들이 방송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사(기업)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를 하고 싶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시큐어넷은 기존 제품 시험인증 분야에 비하면 AI 큐레이션 서비스를 토대로, 제품 시험 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큐어넷의 기본 사업 방향은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안전 인증 작업이 필수이며, 이를 간편하게 하는 것이 시큐어넷의 사업 모델이다.

국내 제품 판매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법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식품위생법,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화학제품 안전법, 화장품법 등 다양하다. 해당 제품이 법안 기준을 넘으면 KC, CE 등의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등 수출을 위해 인증이 필수인데 시큐어넷이 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김 대표는 “기업(제조, 수입) 이미지를 형성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반면 기업 이미지가 무너져 신뢰를 잃는 것은 우리가 깨지는 것과 같이 한순간에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별 제품에 관련한 각종 시험·인증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토

대로 인공지능(AI)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기업에 제품 시험·인증 정보를 ‘업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시큐어넷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품 인증서 성적서 관리 서비스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한다. 사업 방식은 간단하다. 시큐어넷의 AI 큐레이션으로 국가별, 제품별 시험 인증이 진행된다. 인증 대행이 끝나면 해당 결과물을 시큐어넷 플랫폼이 정보화해 보관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시장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 제품 인증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해물질 검출 사례 적발 등을 통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시큐어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700여 곳을 넘어가고 있다”며 “이탈 고객은 0%이며 매달 15%가량 신규 고객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내년에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 교육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며 “2023년은 글로벌 유통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국내 제조 업체의 수출 판로 개척을 사업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민 기자 kjm@

무신사, 강정구·한문일 공동대표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강정구(왼쪽 사진) 프로덕트 부문장과 한문일(오른쪽) 성장전략본부장을 신입 공동 대표 이사로 선임했다. 공동대표의 공식 취임 일정은 다음 달 1일이다.

강정구 공동대표는 2017년부터 프로덕트 부문을 총괄하며 무신사 스토어의 개발, 기획, 디자인 조직의 팀빌딩을 주도했다. 특히, 고객 편의성 측면에서 무신사 스토어의 사용성을 높이고, 커머스 중심의 플랫폼 기술 고도화에 주력해왔다.

한문일 공동대표는 2018년 무신사에 합류해 무신사 테라스, 무신사 스튜디오, 솔드아웃 등 신규 사업 분야를 이끌어왔다. 또한, 외부 투자 유치 및 적극적 기업 인수로 무신사의 빠른 성장세를 견인했다.

무신사는 이번 신입 공동대표이사 선임을 기점으로 사업 전략과 프로덕트 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스토어 입점 브랜드를 위한 지원 시스템과 인프라도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무신사를 창업해 이끌어온 조만호 전 대표는 3일 젠더 논란의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남주현 기자 jooh@

SK이노, 페플라стик 줍기 캠페인 ‘산해진미 플로깅’

김준 총괄사장·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 첫 주자 참여

SK이노베이션은 이달부터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인 ‘산해진미’ 플로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SK이노베이션이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캠페인 ‘아.그.위.그(I Green We Green)’가 시즌3로 돌아온 것이다. 캠페인은 시즌 1 ‘일회용품 줄이기’로 시작해 시즌2에서는 ‘음식물 잔반제거’, ‘폐페트병 텀버(병뚜껑, 라벨 뜯어 버리기) 캠페인’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올해 산해진미 플로깅은 페플라стик 쓰

레기로부터 산과 바다를 지켜 아름다운 지구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산해진미 플로깅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개념을 넘어 사회적가치(SV) 창출로 이어진다.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서울, 울산, 인천 등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페플라стик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후 수거한 페플라стик을 친환경 사회적 기업을 통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해 독거노인, 발달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에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계열사 경영진이 이번 캠페인에서도 솔선수범해 전사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우선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4일 산해진미 플로깅의 첫 주자로 나섰다. 김 총괄사장은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왼쪽 첫 번째)이 4일 서울 중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친환경 캠페인 ‘산해진미 플로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은 “이번 산해진미 플로깅을 통해 우리 구성원들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산해진미 플로깅을 통해 우리 구성원들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구성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 같은 날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손흥민, EPL ‘올해의 팀’에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선정

손흥민(29·토트넘·사진)이 잉글랜드프로축구선수협회(PFA)가 뽑은 ‘프리미어리그(EPL) 올해의 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PFA가 5일(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올해의 팀’ 명단에서 손흥민은 공격수 부문에 선정됐다. 그가 PFA 올해의 팀에 든 건 이번이 처음이며 아시아 선수 중에서도 최하다.

손흥민과 함께 공격진에는 그의 ‘단짝’ 이자 리그 최다 득점자(23골)인 해리 케인(토트넘),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포함됐다. 미드필더로는 케빈 데브라위너, 일카이 쿨도안(이상 맨체스터 시티), 브루누 페르난데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수비수로는 루크 쇼(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후벵 디아스, 존 스톤스, 중앙 칸셀로(이상 맨체스터 시티)가 선정됐다. 골키퍼 자리도 에데르송(맨체스터 시티)에게 돌아가면서, 2020-2021시즌 EPL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에서 가장 많은 6명이 뽑혔다.

연합뉴스

트럼프, 3개월 만의 공식석상 연설서 ‘중국 저격’

공화당 행사 참석 “코로나 배상금 10조 달러 받아내야” 페이스북은 트럼프 계정 정지 조치 2년 더 유지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린빌/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중국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세계가 10조 달러(약 1경1165조 원)의 배상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공식 석상에서 연

설한 것은 약 3개월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16조 달러 규모의 피해를 줬다”며 “모든 국가는 중국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액을 10조 달러로 제시한 그는 “코로나 19 피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작

업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닛케이에는 “트럼프가 유력한 의사소통 수단이었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이용을 사실상 금지당해 지지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구심력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며 “그는 플로리다, 오하이오 등 대선 격전지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4일 트럼프 계정 정지 조치를 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트위터는 1월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에 아예 영구 정지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인사

- ◆교육부 △교육부(국가교육회의의 파견) 박지영
-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유엔 재난위험감사사무국(UNDRR) 아태지역사무소 지용구 △국제협력담당관 우희창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 조정원
-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고동우 △3급 승진 △고용정책총괄과장 편도인 △직업능력평가과장 윤수경
-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실장급) 임용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규현

- ◆한국남부발전 △전보 △전원개발처장 송홍복 △ESG혁신처장 강태길 △기후환경품질처장 지석근 △수소융합처장 함형봉 △투자관리처장 김미영 △ESG혁신처 홍보실장 서정수 △ 혁신정책부장 김용기 △ 상생협력부장 고대석 △기획처 전략기획실장 이창현 △ 윤리준법부장 이현구 △관리처 인재개발부장 이성태 △세무회계부장 이주호 △청정연료실장 김현주 △계약자재부장 여득호 △발전기획실장 이영재 △전력거래부장 박시경 △발전처 복합운영부장 임경규 △기술개발총괄실장 박성욱 △전원개발처 전원개발총괄실장 신준호 △ 발전기계시스템부장 최주몽 △ 발전제어시스템부장 김승우 △ 토목건축

- 설계부장 김상만 △기후환경품질처 기후환경대책실장 권달정 △ 환경관리부장 주재홍 △ 품질경영부장 김해진 △그린뉴딜사업처 그린뉴딜부장 김대중 △해상풍력실장 윤상욱 △그린뉴딜사업처 육상풍력부장 조성환 △수소융합처 수소산업정책실장 송상욱 △ 수소융합사업부장 정근진 △ 수소기술개발부장 김민기 △해외신사업부장 이광수 △미주유럽사업부장 이동준 △아태사업부장 이순현 △투자관리처 출자관리부장 정훈태 △ 국내사업운영부장 김범수 △ 해외사업운영부장 문병승 △신재생개발권역센터장 박석준 △신재생개발권역센터장 경상개발팀장 김경호 △기술전문센터장 류주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김동완
- ◆한국에너지공단 △임원 △기후대응이사 주명선
- ◆신한라이프 △챗터장 △고객전략챗터 이후경 △채널기획챗터 김종태 △고객관리챗터 김은희 △디지털플랫폼챗터 정호준 △채널지원챗터 최명복 △채널교육챗터 반재욱 △마케팅챗터 서상현 △WM챗터 정우성 △상품기획챗터 류민정 △상품개발챗터 최현철 △언더라이팅기획챗터 이효미 △소장 △상속증여연구소 이대희 △센터장 △WM센터 김형민 △고객컨택센터 김동욱
- ◆경향신문 △편집국장 오창민 △논설위원 안호기

부음

- ▲이수복 씨 별세, 신임숙·은주·명철(전 삼성전자 부장)·자선·소옥·은재·호철(아우토스트라세 연구소장) 씨 모친상, 황왕규(전 KBS 보도본부 스포츠국장·전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방송담당)·김창국(전 제일은행 부장) 씨 장모상=5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7일 오전 11시, 02-860-3507
- ▲박복임 씨 별세, 은미라 씨 모친상, 최규현(전라일보 기자) 씨 장모상=5일, 부안효장례식장 VIP3호실, 발인 7일 오전 11시, 063-582-3939
- ▲강영미 씨 별세, 이현구(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씨 부인상, 이병욱·혜인 씨 모친상=6일, 안양장례식장 6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031-477-0096

연원호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유럽에서 '중국 이탈'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정상 회담에 대한 강한 비난으로 한국마저 반중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은 중국도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변국은 소국(小國), 중국은 대국(大國)이라는 근본적인 패권적 인식을 버리지 않고서 중국의 외교 고립이 해결될까.

중국이 한미정상회담 비판 자제한 까닭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이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가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이 기존의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됐음을 밝힌 것이다.

이와 동시에 양국 정부가 현시점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바이든 정부는 대중 견제다. 한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공동성명에 넣는 데 성공했고, 미국은 쿼드, 대만, 첨단기술 협력을 공동성명에 넣는 식으로 맞교환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간의 미팅 이후 조용하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논조의 칼럼을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했다. 그러나 필자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조용하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첫째는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그만큼 교묘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중국이 반응을 자제했다는 점이다.

직전에 있었던 미일정상회담 공동선언문과 달리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는 '중국'이라는 직접적인 언급 없이 거의 모든 대중 견제 내용을 담아냈다. 내용만 보면 미국이 대중 견제에 한국의 동조를 이끌어냈다고 해석할 수 있고, 표현에 주목하면 한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원론적인 동조를 보였다고 해석할 만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도 한국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원하는 바를 얻어내며 미중 문제에 있어 한국의 원칙을 지켰다"고 평가할 정도로 교묘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우리의 목소리도 나온다. 첫째는 지정학적 우려다. 인도태평양 구상과 신남방정책의 연계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적 틀에 한국이 동참했다는 판단이다. 쿼드 동참은 아니지만 미국은 한국을 미국의 전략적 구상에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으며,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구상하는 구도에 한국을 동참시켰다는 점을 중국은 우려한다. 또한 한·미·일 삼각협력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동북아 군사력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둘째는 경제적 우려다. 한국의 4대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것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미국이 흔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기술패권 경쟁으로 발전해가는 상황에서 한·미 공동성명에 담긴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협력과 핵심기술 수출통제 및 투자심사 강화 등의 협력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중국은 안보 분야보다 더욱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당시 '16+1'로 시작된 중국-중동부 유럽 국가 간의 경제협력 추진기구(China-CEEC)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

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왔다. 하지만 올해 2월 회의에는 라트비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등 6개국 정상이 불참하며 사상 최저 출석률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비난으로 한국마저 반중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은 중국도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중국이 아쉬움 정도로 반응을 자제한 배경이다.

흥미롭게도 이를 인정이라도 하듯 시진핑 주석은 며칠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 30차 집단 학습에서 "중국의 종합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으며 개혁 발전에 유리한 외부 언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대외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신뢰·사랑·존경받는 중국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국은 소국(小國), 중국은 대국(大國)이라는 근본적인 패권적 인식을 버리지 않고, 대외 이미지를 포장하는 것만으로 중국의 외교 고립이 해결될까. 필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소국은 대국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2012년 남중국해 문제로 필리핀, 2016년 사드 문제로 한국, 그리고 2021년 리투아니아의 CEEC 탈퇴에 중국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입장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대방로

김희정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 자문센터장



팬데믹 이후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전과 달라졌다. 사무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체온을 재고 'QR체크인'을 하며, 5인 이상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은 게 언제인가 싶다. '몇 달 지나면 다시 팬텀아 지겠지' 작년 초부터 했던 이런 기대는 아직도 기대에 머물러 있지만, 이미 많은 변화에 익숙해지고 심지어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도 생긴 것 같다.

달라진 것들 중에 금융시장의 변화를 빼놓을 수가 없다. 코로나 발생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는 역대 최저금리,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걱정이 시장을 달구고 있었다. 그런데 날벼락처럼 등장한 코로나발 경제위기는 순식간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며 투자자들의 패닉을 이끌었다, 이제 넘치는 유동성

저축, 투자, 그리고 자산관리

으로 밀어올린 자산 가치는 조심스런 거품 논란과 함께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을 걱정하게 한다.

지난달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상향조정하면서, 지역별로 편차는 크지만 주요국의 경제규모가 내년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종전보다 0.5%포인트(p) 높은 3.8%로 전망했다. 1일 발표된 '5월 수출입동향 자료'에서는 지난달 수출액이 역대 5월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한다, 수출 증가율도 3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코스피와 S&P지수도 올해 사상 최고점을 찍었고, 1분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아 주가가 큰 폭 상승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줄줄이 연출됐다.

한마디로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금융시장에는 오히려 웬지 모를 불

안감에 투자의 방향을 고민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졌다. 지난해 자산 시장은 어디에 투자를 하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면, 올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장을 이기기라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경기가 살아난다고는 하나 이미 오른 자산 가격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다고 하니 상승 여력을 좀 더 기대해도 되나 싶다. 살 수도 팔 수도 없고, 막연히 갖고 있기도 불안하다.

최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뛰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우려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면 그동안 각국에서 시장에 풀어진 막대한 자금을 언젠가는 줄일 것인데,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간 자산들의 가격이 거품일까 걱정되다 보니, 특히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언제 본격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예민하다. 연일 언론과 매체를 통해 전문가들이 진단과 전망을 내놓고 있

지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한다는 불확실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예측이 어렵고 복잡한 시장의 이슈들이지만, 예전보다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공부하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SNS에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관련 정보와 영상들이 넘쳐난다.

금융은 저축에서 투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저축에 비해 투자는 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이제 투자는 개별적인 재테크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으로 조점이 맞춰지며, 주기적인 자산의 진단과 배분이 중요해졌다.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시장 변화에 연착륙하려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스스로 자산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가능하다. 금융의 변화에 대응하고 노력하는 만큼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도 대중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장 파울 리히터 명언 "소심한 자는 위험이 닥치기 전에, 겁쟁이는 위험이 닥쳤을 때, 용기 있는 자는 위험이 지난 후 두려움을 느낀다." 독일의 미술사학자. 그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37세부터 시작해 약 30년간 중단 없이 쓴 5천 쪽 분량의 육필원고를 편집해 책으로 엮어내 유명해졌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47-1937.

☆ 고사성어 / 난사필작이(難事必作易)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생긴다는 말. 쉬운 일은 조심해서 하면 어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세상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난다(天下難事必作於易天下大事必作於細)." 출전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 제63장.

☆ 시사상식 / 파레코(Parecon) 참여경제 (Participatory Economics)의 줄임말.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계획경제 체제도 아닌 새로운 경제체제를 뜻한다. 참여경제는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모델을 차용했다.

☆ 우리말 유래 / 날 썼다 원래 영화인들이 쓰던 말이다. 밤이 나오면 영화 장면은 꼭 밤에만 찍어야 했다. 미처 다 찍지 못하고 날이 새면 하루를 기다려 다음 날 밤에 다시 찍을 수밖에 없었다. 일을 세 시간에 끝내지 못하거나 예상과 빛나갔을 때를 가리키는 말로 쓰게 됐다.

☆ 유머 / 집안에도 있는 고수 나이 육십 넘어가니 말하다가 갑자기 어떤 단어는 잘 안 떠오른다. "그게 뭐더라?, 그 사람이 누구더라?"하고 끄덕일 때 아내가 한 말. "역지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버려 두면 저절로 생각날 때가 있어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میم(Meme)은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출간한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처음 나온 용어다.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시스(Mimesis)와 유전자(Gen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유행처럼 퍼드는 문화적 현상, 콘텐츠 등을 의미한다

일종의 놀이문화로 치부됐던 밈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개설된 주식 토포방 월스트리트벳스(WallStreetBets)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이 나타나며 '밈 주식'이라 불리게 됐다. 이들은 밈 주식 관련해 재미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며 투자를 놀이문화로 바꾸고 있다. 밈 주식은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성 매수에 따라 주가가 급등

락한다. 이른바 '레딧주'라 불리는 AMC엔터テイン먼트, 게임스톱, 블랙베리, 베브베스 엔비온드, 마이크로비전 등은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의 등락률을 보이고 있다. 기업분석에 따라 공매도 포지션을 잡은 대형 헤지펀드들조차 개인투자자의 비이성적 열광을 예측하지 못해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밈 주식에 열광하는 건 '제2의 테슬라'를 찾아 나선 전 세계 2030 개인투자자들이다. 레딧에 거론되는 종목 중심으로 젊은 투자자들이 빠르게 추격 매수하면서 주가를 움직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급등락이 반복되자 미국 증권업계에서도 밈 주식에 대한 분석을 포기한다고

이인아 자본시장부/ljh@



밈 주식, 씹쓸한 광풍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and others.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K팝부가 필요 없듯이

“K팝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기획사가 열심히 해서 잘된 걸 마치 우리나라가 기획한 것처럼 자랑하는 걸 볼 때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음악이 고맙다’는 입장이 좋은 것 같아요.”

며칠 전 한 일간신문에 음악인 성시경 씨가 했다고 인용된 말이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K열풍’의 성과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에 애들러 비판하는 것이 될 듯하다. 필자도 그런 풍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 공감 가는 것이 많을 말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 말의 함의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예술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개인 혹은 민간의 창의력,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어야 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그쳐야지, 직접 무언가를 성취하겠다고 나설 때 오히려 실패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바둑은 중국과 더불어 세계 최강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 그야말로 유일한 최강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바둑이 강한 것은 바둑부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보자. 만약 방탄소년단(BTS) 같은 그룹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획하고 육성하면 어떻게 될까?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기는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룹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리라는 것은 필자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 若烹小鮮 (약팽소선)

건국대 석좌교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K팝부’를 설치해서는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이다.

보통 국가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나라일수록 정부가 많은 일에 직접 나서서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구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국가들, 북한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인데, 국가의 직접적 개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이러한 나라들은 과거 이른바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이라 하여 체육계의 유망주를 국가가 직접 발굴, 육성했고 그 결과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딴 사실이 있다. 또 고전음악을 포함한 예술 분야에서도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체제경쟁에서 패배하여 더 이상 국가가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데에도 있지만, 그보다는 개인의 능력,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시장과 정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많은 경우 효율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지만, 그 결과가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보다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말하자면 ‘정부의 실패’이거나 그에 유사한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로서는 괜한 낭비만 한 꼴이 된다.

물론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정부의 개입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와 같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다른 분야에도 그런 예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성공’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나 오해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믿음과 다르게 움직인다. 몇 달 전 이 칼럼에서 밝힌 바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러한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을 포함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규제가 완화되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그 성과는 훨씬 크다. 즉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성과는 낮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규제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예로 든 예술분야와 같이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못하면서 사회적 비용만 크게 한다. 정부의 역할은 잘 할 수 있는 데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시설

세수 늘었다고 재난지원금에 털어먹자는 여당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공식화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이 2차 추경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4차례와 올해 1차에 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6번째의 추경이다. 적게 잡아 20조 원, 많으면 30조 원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금과, 소비진작용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다만 여당과 정부의 입장은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무차별로 돈을 뿌리는 데 반대한다. 보편 지원보다 취약계층의 선별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최소한 소득상위 계층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밀어붙이면 정부는 결국 역부족인 현실이다.

지난해 5월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 원이었다. 여기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가 여당의 골격이다. 올해 세수(稅收)가 호조를 보이면서 적자국채 발행의 부담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1분기 국세 수입이 88조 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9조 원 늘어났고, 올해 전체적으로 32조 원의 추가 세수가 예측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빛나는 게 아니라 세금이 더 갠 재정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올해 반짝 세수가 증가했다고 또다시 재난지원금으로 털어먹자는 발상이다. 나랏빚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에 다시 전 국민에 돈을 뿌리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만 키우고, 코로나 이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K-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작년 4차례의 추경으로 재정적자가 112조 원으로 불어났고, 이는 모두 정부의 빚이다. 올해도 14조9000억 원의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965조9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졌다. 곧 국가채무 1000조 원이 된다. 문제인 정부 출범 이전 2016년 국가채무는 626조9000억 원, GDP 비율은 36%에 그쳤다.

모든 국민에 무차별로 재난지원금을 뿌린다고 해서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피해업종 매출 증대 효과가 미미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도 있다. 올 들어 늘어난 세수가 상당 부분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집값 폭등으로 인한 양도세 증대의 효과이고 보면 앞으로 세금이 계속 더 갠 것이란 보장도 없다.

세수에 일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면, 우선 나랏빚을 일부라도 갚아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더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증되는 상황이다. 막대한 재난지원금 살포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더 키우고, 그동안 팽창재정의 부작용을 수습하는 출구전략까지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노트북을 열며

송영록
산업부 차장



골목에 차량 보닛을 열어놓은 똑같은 두 대의 차량을 길가에 놓아둔다. 다만 한 대의 차량은 유리창을 살짝 깨뜨려 놓는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보니 깨진 유리창의 차만 형편없이 망가진다.

사소하게 방치한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퍼지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 이론이다. 1982년 범죄 심리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케링이 실험을 통해 발표했다. 이 이론이 대중에게 유명해진 이유는 1994년 뉴욕시장이던 루돌프 지리니아가 범죄소굴로 불리던 뉴욕에서 이 이론을 적용해 단지 지하철 낙서를 지우고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 범죄율을 급감시킨 덕분이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잘 맞는다. 예컨대 길거리 지하철 환풍구 같은 곳에 주인 없는 커피 컵들이 몇 개 놓여 있으면 행인들이 하나둘씩 비슷한 커피 컵들을 버리고 간다.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도 맥락은 같다. 전 세계 많은 기업은 경영 전략이나 비전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깨진 유리창’과 중대재해처벌법

도 정작 사소한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과 조직원들에게 ‘작고 사소한 문제’부터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중요하다.

사소한 지점에서의 잘못이 쌓인다면, 결국 기업의 신뢰도는 바다로 떨어진 다. 임직원의 이탈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기업이 파산에 이르렀던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소한 문제’는 절대 사소하지 않다. 그중에서도 잇을 만하면 발생하는 작업장 안전 사고는 치명적이다. 숙련된 작업자들이라도 사소한 문제를 놓치면 사고는 발생한다. 소중한 인명은 물론, 기업으로서도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의무주제 및 의무내용을

명문화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기업으로서 모든 안전 사고의 책임을 경영자에게 묻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에 대한 법의 책임만 넓히고 처벌만 강화해선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김부겸 총리와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도 재계는 일제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오키의 90%가 기업 대표인데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사고로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한 하한 규정은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재해 발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어렵다”고 말했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국내 임직원은 10만 명이 넘는다. 이들 중 한두 명의 작은 실수가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법이다. 나는 작은 담배꽂이를 하나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주변은 담배꽂이로 산더미가 된다. 담배야 그렇다 치고, 안전사고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개인의 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과 현장의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때다. syr@

미리 보는 한 주 기저효과라도... 고용개선 이어질까

이번 주에는 국민소득, 국제수지, 국가재정, 고용 등 다양한 경제지표 공개가 대기하고 있다. 정부 사이드의 현 경기진단을 엿볼 수 있는 경제동향 발표도 예정돼 있다.

한국은행은 8일(화) 4월 국제수지(잠정)를 내놓는다. 앞서 3월 경상수지는 78억2000만 달러(약 8조7897억 원)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4월엔 12월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증가해 경상수지가 소폭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월간 재정동향(4월)을 발표한다. 최근 2차 추경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추경 재원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국세 수입이 관심이다.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 원 증가한 바 있다.

한은은 9일(수) 1분기 국민소득(잠정) 결과를 내놓는다. 한은이 최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전망치를 기준 3.0%에서 4.0%로 1%포인트 높

인 가운데,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가 4월 27일 발표된 속보치(1.6%)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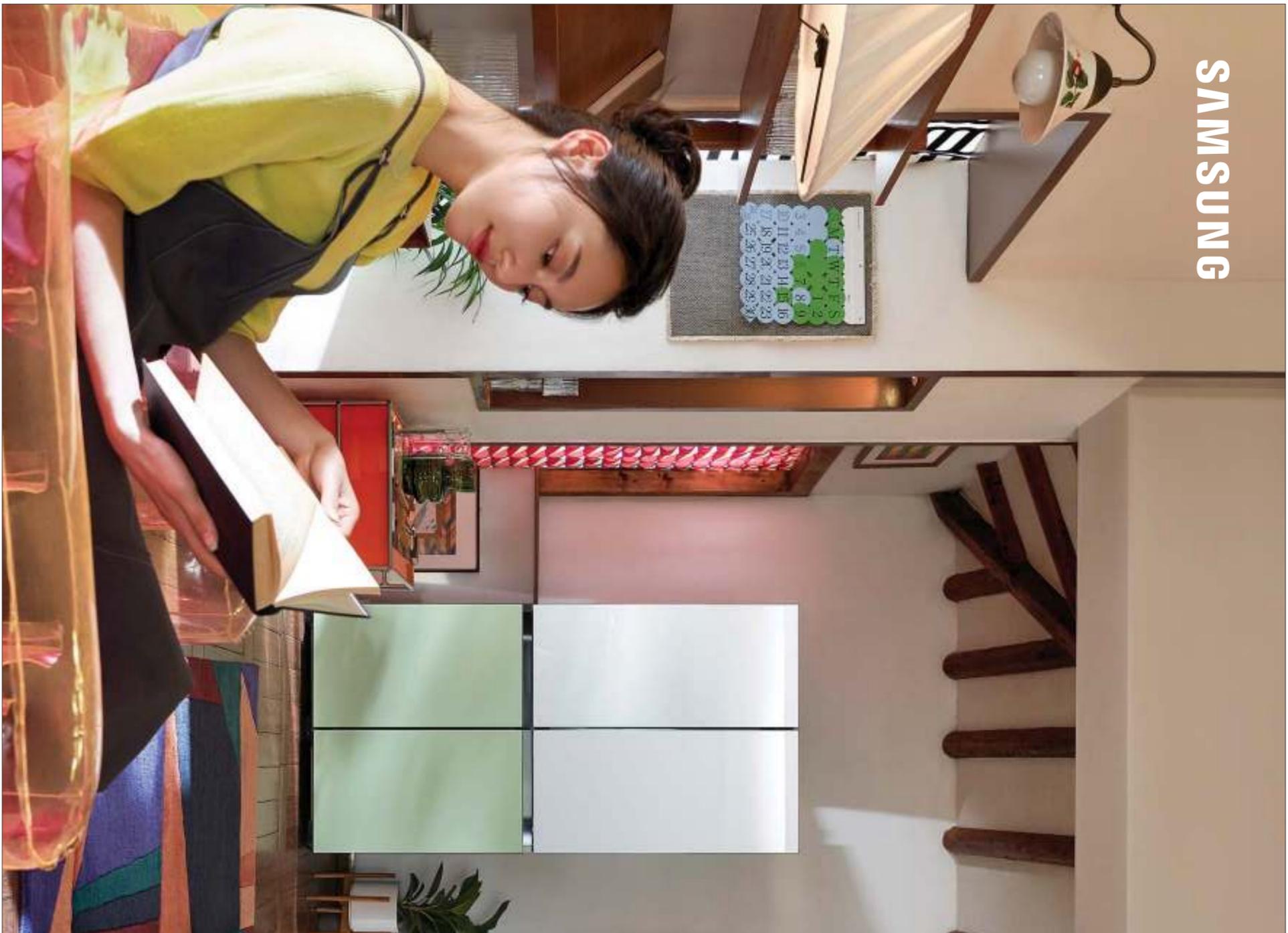
같은 날 통계청은 5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4월 취업자 수는 272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5만2000명 늘어난 바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직후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되었는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재부는 각각 7일(월)과 11일(금) 6월 경기진단 보고서를 내놓는다. 5월 경제동향에서 KDI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또한 그린북 5월호에서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제조업·투자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면 서비스 부진 완화 등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경기 회복’, ‘내수 개선’이라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경기진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SAMSUNG



삼성가전을 언제나
새것처럼 즐기는 방법



삼성케어플러스 | 가전/TV

걱정까지 씻어주는 전문세척 | 처음 성능처럼 관리하는 가전케어 | 안심까지 옮겨주는 이전설치



스팀세척



UV살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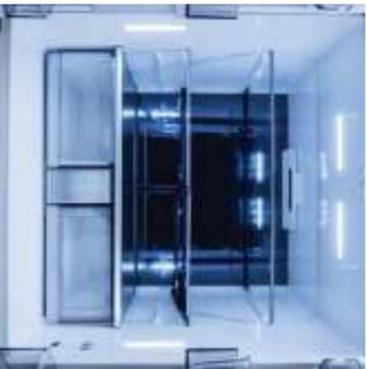
이전 설치



고압세척



필터 교체



삼성케어플러스 구매문의는 samsung.com과 디지털포라지에서